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국민승리21 / 청년진보당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공저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엮어 펴냄

값: 2,000원 이 책의 판매 대금은 구속된 이의철 씨와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국가보안법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국민승리21 / 청년진보당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공저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엮어 펴냄

1998년 5월 7일

사회주의자 19명이 보안경찰에 의해 연
행당했습니다.

1심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김동철·박호근씨가 실형 2년,
박종호·문명주·류민희 씨가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나머
지 14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의철 씨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신념 철회나
법정구속이나 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신
념을 철회하느니 차라리 법정구속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료집은 2월 3일 국가보안법 공동토론회에 맞추어 발행했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각 단체의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신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
메시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권두언

그 동안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지난해 11월 6일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주의자(IS) 조직원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함으로써 우리에게 법정구속을 위협하고 있는 검찰·법원을 폭로해 왔습니다.

여러 동지들이 보여 준 뜻있는 지지와 연대 덕분에 1월 20일 열렸던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는 신념을 굽히지 않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신념 철회를 강요하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려는 사상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사상과 신념을 무기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사상을 공세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에 재판장은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신념 철회를 강요했다는 거냐"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어차피 이 야비한 사상 재판에서 승리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사상을 철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요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는 반대 의견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마녀재판이 사라진 것은 설사 생명을 잃을지언정 비겁한 거짓 밀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화 <크루서블>을 보셨다면 영화 주인공(다니엘 데이 루이스 분)이 거짓으로 자백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나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신체의 구속과 신념 사이에서 고통스런 선택을 강요합니다. 감옥에 있는 이의철씨가 편지에 썼듯이, "이 나라에서는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신체의 구속이 가해지는 것은 관례"입니다.

우리들이 법정에서 '나는 더 이상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는데도 구속시킬 바보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한총련 학생이 '나는 더 이상 한총련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구속시킬 바보 판사는 없을 것입니다.

악법에 맞선 싸움에서 신념을 당당히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운동의 대의를 지키는 소중한 투쟁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운동권 일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용주의적 대처 방식이 과연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지 곰곰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나치에 의해 살해된 한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탄압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치가 민주주의자를 잡아갔다. 그 때도 모두들 침묵했다.

그리고 나치가 기독교 성직자인 나를 잡아갔다. 그러나 그 때는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소위 '극좌'에 대한 공격은 바로 우리 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그렇기 때문에 '극좌'에 대한 방어는 동시에 전체 운동에 대한 방어임을 주장하는 자성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려는 모든 이들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나치와 같은 파시즘 정권은 아니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반민주·반노동자적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에 98년 5월 1일 노동자들의 메이데이 투쟁을 보고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작년 5월 1일 노동자 투쟁의 기세에 당황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현대자동차 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영남위원회' 조작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노동자들과 연관을 맺고 있던 진보민청, 안양민청, 민족사랑노동청년회에 대한 탄압이 잇따랐고, 최근에는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탄압의 대상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을 마치 북한의 '노동당 2중대'라든 양 매도하며 시도 때도 없이 학생들을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92년 2월 이후 계속 되어 온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분명 전체 운동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 한총련과 국제사회주의자들과 같은 '극좌'에 대한 방어는 전체 운동에 대한 방어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들은 운동세력 전체를 공격하기 위한 일환으로 극좌에 탄압의 화살을 겨누는데, 직접 관계가 없다 해서 침묵한다면 결코 저들의 공격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2백여 년 전에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 하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의 우 리들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 탄압받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방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목차

권두언

제1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 발제문 및 참고자료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김삼석 민권공대위 집행위원)	8쪽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이우봉 재판 계류 국제사회주의자)	15쪽
국가보안법, 금년에는 폐지하자!(이재영 국민승리21 정책국장)	25쪽
정치·사상의 자유와 정치개혁-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돼야(청년진보당 정책국)	28쪽
한국판 마녀사냥, 그 천박함에 대하여(경희대학교 총학생회)	32쪽

제2부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탄압받았는가

국제사회주의자 조직 탄압 역사	36쪽
국제사회주의자들 7년간 연행자 명단	44쪽
이의철 씨 법정구속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보도 자료	47쪽
성명서	53쪽
재판 계류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식지	56쪽

제3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각 대학 성명서	64쪽
국제 연대 편지	78쪽
덕성여대 한총련 농성단의 연대 편지	83쪽
사회주의자들을 방어하는 서명자 명단	84쪽

감옥에서 온 이의철 씨 편지 뒷표지

제1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 발제문

● 주발제 참고 자료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

● 패널 발제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국민승리21
국가보안법, 금년에는 폐지하자!

청년진보당
정치·사상의 자유와 정치개혁 —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돼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한국판 마녀사냥, 그 천박함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

김삼석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남해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있다.

그는 한번도 야당을 찍어 본 적이 없었다. 지난 대선 때 "내년에 김대중 씨가 안 되면 또 대학생들 잡혀 들어 간다"며 김대중 씨를 찍었다. 남해에서는 김대중 씨를 찍었다고 어디가서 얘기도 못할 분위기일 정도로 여권 일색인데도 대학생인 손녀를 생각하며 찍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다. 정권이 바뀐 요즘 수배 중인 손녀에게 수시로 안부를 물으며 "너저들은 어찌냐, 해결 실마리가 있냐?"고 묻곤 하기 때문이다.

손녀 이미성(23·여·동국대 98년 부총학생회장·국어교육학과 4년) 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서 지금 수배 중이다. 이 씨는 "할아버지! 대의원 탈퇴서는 '중이 한 장'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가두기보다는 차라리 제 육신을 가두겠습니다. 데모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득한다.

이 씨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남해에서 서울 동국대에 진학해 1학년 때 과학생회 일, 2학년 때 사범대 풍물패인 아라너리(제 갈 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활동했고, 3학년 때는 과학생회에서 매주 아침 8시 소모임에서 신문읽기, 시사토론, 청소를 하면서 금요일엔 각자 집에서 반찬 한 가지씩을 싸와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평가'를 하곤 했다. 소모임이 널리 알려져서인지 98년 4월 부총학생회장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제일 먼저 날아온 것은 6월 10일까지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라는 검찰의 우편물이었다. 그 뒤 지금껏 기약 없는 수배 생활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 씨와 비슷한 처지인 학생이 동국대에만 5명이다. 옆의 단국대는 더 심하다. 또 아주대는 98년 구속자가 2명(작년 4명), 경기대(수원)는 구속자가 1명, 수배자가 2명이다. 각 학교마다 3~6명 정도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 중이거나 구속 중이다. 보통 각 학교의 11명의 대의원 중 반수 이상이 검찰, 경찰의 탈퇴 공작에 못이겨 탈퇴했다. 탈퇴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하루에 3~6명 정도가 연행되고 있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양심수는 생길까. 최소한 인권 대통령이 들어섰으면 양심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기대를 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는 한국 사회의 국가권력과 법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을 하고 있다. 그 동안 대통령 직속 기관인 안기부를 비롯한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공안기관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공안관계법으로 공안사범 즉 양심수를 만들어 내면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의 위기를 돌파해 나왔다. '양심수' 출신 김대중 정권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 정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철저히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

1)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신장개입하다

안기부... 정권이 바뀌어도 안기부는...
정권은 바뀌어도 안기부는...
안기부... 정권은 바뀌어도 안기부는...
안기부... 정권은 바뀌어도 안기부는...

대표적인 공안기관인 안기부의 문제는 근본적 개혁의 핵심이다.

옛부터 안기부 스스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다만 안기부가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뿐 각종 사건에 안기부가 개입한 흔적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먼저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옛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개입한 7월 22~23일의 부산·울산 '영남위원회 사건'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재현된 용공조작, 인권유린 사건이었다. 터진 시기가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생긴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97년 9월 안기부와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동아대 간첩단 사건을 터뜨려 한총련 내부에 간첩이 침투했다면서 졸업생과 총학생회장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운동에 빨간색을 씌우려 했던 이 사건도 1년도 안 된 98년 7월초 부산고등법원에서 간첩 사건 관련자 모두를 무죄석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미 관련자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천형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어디에다 호소할단 말인가. 학생, 시민들에 대한 안기부와 경찰의 구속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편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적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학 작품에서 대학 논문,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 PC 통신상에 띄워놓은 글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작년에 방북한 문규현 신부가 북한을 갔다왔다고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순수한 신앙 행위'인 방북명 서명을 찬양·고무죄로 구속(98년 10월 21일 보석으로 풀려남)한 것도 안기부의 무리한 수사이며 이는 안기부가 중국 현지까지 불법으로 팩스를 도청해 만들어 낸 사건이었다.

분단을 빌미로 재야 통일운동가는 물론 양심 세력에 대한 탄압이 '조작간첩' 사건 등으로 발표되면서 안기부의 공작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정기국회 전에 연이어 터진 '조작간첩' 사건은 국민들의 해체 요구에 몰린 안기부의 몸부림에 다름아니다. 98년 9월 17일의 일본 관련 윤종세씨 사건은 순수한 통일 의지로 재일교포와 서신을 주고 받은 것이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인 목적수행죄가 적용되었고 또 동포애를 발휘한 북한동포돕기운동에까지 간첩 혐의를 씌운 범민련 사무처장 최진수씨 구속사건, 그리고 오스트리아 거점 간첩 사건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안기부의 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다 관문점 총격 요청 사건발표는 안기부의 구태를 완전히 벗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관문점 총격 요청 3인방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 한편으로는 정적인 같은 보수야당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재야 세력의 98년 하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자 했다. 그러나 럭비공처럼 엉뚱한 고문 공방으로 번져 갈수록 국가정보원으로 넘어가려는 정권의 의도는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국회 '529호'의 정치 사찰은 여전히 안기부 스스로는 민주적 개혁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가정보원으로 이름만 바꾸고, '정보는 국력이다'며 부훈을 바꾸고, 3차장제에서 2차장제로 바꾸면서 업무관장을 교대했다 하여 과연 안기부가 바뀐 것일까. 또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안기부 직원 1000여명 감축했다 하지만 사실, 감축된 인원은 경찰 보안수사대로 자리를 옮겨 공안탄압에 앞장서는 실정이다. 지난 정기국회 때 안기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99년 1월 22일부터 국가정보원이 안기부를 대신했다. 안기부 지하철 스티커는 국가정보원 스티커로 바뀌어 '정보를 드리기에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며 국민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안기부 청사에 백범 김구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영정을 걸어 놓았다고 한다. 나름대로 거듭나겠다는 제스처는 가상하지만, 아무리 잘 봐주려 애를 써도 되지도 않을 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당장 전 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간부들의 재판에서도 대부분 유야무야 풀려나고 있지 않은가.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안기부 개혁을 그들 자신이나 가제는 게 편인 검찰과 기득권층에 맡겨 두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그들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만, 그들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않는 것을 통해서만, 인권유린을 종식시킬 수 있다.” (98. 9. 29. 동국대에서 발행하는 <서남 천리마> 희망 28일자, 9호에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민족민주세력들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와 탄압을 막고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2) 국가보안법, 민주질서보호법으로 신장개입하다

경찰 보안수사대로 ‘옷’만 바뀌입은 ‘퇴출’된 안기부 요원들은 서로 공을 다투며 경쟁을 하듯 공안탄압에 앞장서서 한총련 씨말리기, 학생운동 씨말리기에 나서고 있다.

▷ 10월 19일 아침 8시 30분경 전남대 공대 여학생회장 최은옥(화공 95), 인문대 여학생회장 한덕희(국문 96), 경영대 여학생회장 김지수(지역개발 96), 학교에 나오다가 동시 연행

▷ 22일 오전, 부산대 인문대 학생회장 배지영(중문 95), 구서동 아파트 부근에서 연행

▷ 23일 밤 10시 50분경, 관동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같이 있던 후배와 함께 연행

▷ 25일 새벽 4시 40분경부터 6시 사이에 졸업생을 포함하여 인제대학 학생 5명 연행, 학내에서 연행된 학생들은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여곤(토목공95), 서영호(기계공94). 집에서 자고 있다 연행된 학생들은 정현자(철학95), 이미경(미생물94), 통영에서 MT중 연행된 학생은 동아리연합회장 조진승(통계96). 이상 5명.(인제대학교는 지난 5월 27일 ‘자주대오’라는 조직사건이 조작되었던 곳이다.)

▷ 26일 새벽 12시 30분경, 경상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실에 보안수사대 30여 명 난입

▷ 27일 저녁 8시 40분경, 인제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정종태(법학92, 졸업생),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인제대학교는 5월 27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학원 침탈과 많은 학생들이 연행된 곳이다.)

▷ 28일 새벽 4시경, 동아대학교에 보안수사대 30여 명 난입

▷ 28일 아침,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성수역에서 유인물을 나눠 주다가 전원 연행

▷ 29일 밤 11시 45분경, 경성대학교 공대 학생회실에 보안수사대 가스총을 들고 난입

▷ 29일 충북지역총학생회연합에 마지막 남은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인 충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장 박정선(안전3), 대동제에 가려던 중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

▷ 30일 오전 8시 50분경 아침 선전을 진행하던 동아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 구세운(행정 4), 숨어 있던 보안과 형사 20여 명에 의해 폭력연행

▷ 31일 오후 3시경, 집에서 쉬고 있던 경성대학교 한 학생, 영장도 없는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

▷ 11월 2일 새벽 2시 30분경,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전경 1개 중대를 앞세운 보안수사대 난입, 경상대 학생회장 문기호와 이철희, 김선봉 등 3명의 학생 연행. 이 외에 집에서 정윤희(중문 95), 학교로 올라오던 김동관(영문 96) 연행...모두 5명의 학생연행

▷ 7일 충남대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25, 기계설계 4) 연행

▷ 8일 저녁 7시경 한국민중대회를 마치고 영등포역까지 행진한 후, 인도에서 참가단위별로 인원점검과 마무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전경들이 들이닥쳐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연행하며 폭행을 가함. 경찰들은 폭력을 자제하라며 항의하는 시민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2명이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찍히는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음. 학생 4명과 시민 7여 명이 연행되었고 영등포경찰서는 연행된 학생과 시민에게 허위진술서 작성을 강요함.

▷ 13일 아침 7시 35분경, 한총련 대표로 지난 96년 방북했던 이혜정 씨가 보안관찰법 위반(출소 사실을 신고 안 했다는 이유)으로 연행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국가보안법이 저지르고 있는 생생한 탄압의 역사를 단 40여 일 동안 확인한 것이 이 정도이다. 이것이 김대중식 민주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인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질서수호법’으로 이름만 바뀔뿐 탄압이 계속된다는 걸 1999년 1월 15일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석방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민중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투쟁하겠다

‘영남위원회’ 사건의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이 법정을 나서면서 가족과 방청객 등을 향해 던진 말이다. 1999년 1월 1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재판에서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오봉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제3조)를 적용, 박경순, 김창현(울산동구청장) 씨 등 관련자 모두에게 아래와 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 박경순 :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 정대연 :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 김창현 :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 방석수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이철현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김용규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이정희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이 회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임동식 : 징역 9년 자격정지 9년
- 김이경 :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 김명호 :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 이은미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김성란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천병태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 홍정련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재야·시민단체들은 “사법부 폭거”라고 비난했고, ‘영남위원회 부산·울산 공동대책위’도 “오늘 선고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송두리째 묵살하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인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스스로 반인권적인 정부임을 드러낸 재판”이라며 정부와 사법부가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철회하고 관련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이 마지막 비명을 지른 뒤 남에 의해서 억지로 간판을 내리고 민주질서 보호법으로 신장개

업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순간이다.

3) 국가 정보원과 민주질서 보호법은 근본적 개혁의 대상이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안기부, 국가보안법, 양심수 문제로 기로에 서 있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은 두 번이나 자기를 살려준 미국에 대해 지금까지 여느 통치자가 보인 것을 능가하는 '절대적 충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일 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에게서 전수받은 소위 햇볕정책으로 통일정책보다는 '북한 관리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한총련의 주장과 요구를 묵살, 탄압하기 위해 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애호 분위기는 이를 용납치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북한 위협을 핑계로 그 철폐를 거부하다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존재 위기에 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이며, 올 2월부터 시작될 UN인권위원회, 국제펜본부, 케네디인권재단, 국제노동단체, 아시아워치, 대만인권협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세계적인 인권단체와 세계민청, '국제사회주의자' 국제본부 등 해외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철폐를 권고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장기수를 비롯한 많은 양심수들을 하루 빨리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 대사관에 항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한다.

사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를 기각하기도 했다. 최근 몇 개의 여론조사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게는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많게는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문의 일면이 이러한 기사가 장식될 만큼 여러 곳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라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은 지금도 예전과 똑같이 한총련,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

진보민청, 안양민청,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통민노회 등의 청년단체는 물론 민주주의민족통일 인천연합,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을 마구잡이로 적용하는가 하면 용산 도원동 철거민 탄압, 부산·울산 '영남위원회' 사건, 문규현 신부 구속, 노래패 희망새 탄압, 만도기계·조폐공사 공권력 침탈 등 공안탄압이 끊이지 않는다. 해적판 영화 '준법서약서'와 '공안탄압' 프로가 동시 연장 상영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공안탄압' 프로그램에는 국제인권 단체의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미국 유학중 이적단체로 규정된 재미한국청년학생연합에 가입, 반미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89년 구속기소된 박태훈(35)씨에게 한국 법원이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가입, 찬양·고무)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구제조치를 취할 것 등을 김대중 정권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월 27일 박태훈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인권규약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구제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박씨가 재심을 신청, 무죄판결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국내법의 테두리에서는 금전배상을 포함한 모든 구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를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이고 "권고적 효력을 갖는 유엔인권이사회는 국보법의 임의적 적용을 경계한 것이지 국보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국보법을 엄격히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아울러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내외의 거

센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관에 들어가기 직전의 국가보안법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드러낸 셈이다.

또 3·1절 사면을 미리 가보자. 기만적이고 반쪽이 될 사면으로 불을 보듯 흰하다.

준법서약서를 거부하는 북한 출신 비전향장기수 몇 사람만 풀어주고 최대의 비리사범인 김현철을 사면·복권시키려 하고 있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나머지 양심수들은 찬밥 취급해 김대중 인권 정책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구속된 노동자 중 석방될 이는 적은 수에 머무를 것이다.

4)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과 국제 네티즌들에게 1천만인 서명을 제안하자 -한국의 모든 정치범의 즉각적인 석방과 복권을 위해-

10년 전 세계 여론에 물렸던 사회안전법이 교묘히 보안관찰법으로 바뀌었듯이, 98년 7월 1일 사상전향제도가 교묘히 준법서약제로 바뀌었듯이, 99년 1월 22일 안기부가 교묘히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듯이, 조만간 국가보안법이 더욱 교활하게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결론은 하나다. 김대중 정권이 보안관찰법과 준법서약제, 국가정보원과 민주질서보호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99년 1월 15일 현재, 302명(민가협 집계)의 양심수가 '양심의 도살장'인 감옥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배세력은 반공이 곧 국가안보이며, 정권안보가 곧 우리 국민들의 안보라는 논리로 국가보안법을 50년간 지탱해왔다. 국가보안법 50년간 우리의 초보적인 자유, 권리, 통일 논의조차 질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넘기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사회 속에서 김대중 정권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세계 인권의 해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분위기를 조성한 중요한 시기였다. 9월 2일 창립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세계인권선언 지지 1백만인 서명을 시작했다. 또 한국인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제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과 조국 통일, 민권 보장, 인권 신장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없고 양심수가 없는 나라가 될 때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조국 통일에 한 걸음 다가서는 민권이 보장되는 세상이 된다.

더욱 세련될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대체입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세계 평화애호 민중과의 굳건한 연대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지금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질서보호법 대체입법 저지를 위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과 네티즌들에게 1천만인 서명을 제안하자. 평범한 시민과 학생의 서명의견을 남기면서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역대 정권은 무수한 양심수를 8평도 안 되는 차디찬 감옥이라는 공간으로 잡아들였다. 정권이 바뀐 지금의 상황은 과거보다 더하다. 진정으로 애국하고자 투쟁이라는 말을 외치며 지금도 수배와 구속,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이가 울부짖고 있다. 진정 국민의 정부라면 국민의 요구와 뜻을 알아주어야 한다.

그분의 말처럼 자신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름처럼 대중을 생각해야 한다. 대중은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역사를 바꾸어 갈러 한다. 국가보안법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루 속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대중의 요구를 가슴으로 받아 안길 빈다. 그리고 감옥에서 조국

을 생각하며 지금도 투쟁하시는 분들을 석방하라. 무엇이 틀렸던가. 노동자·농민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은 통일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늙으신 범민련 어르신들 역시 조국의 번영된 미래를 위해 통일을 외치며 야윈 팔 힘껏 뻗으며 ... 모두가 진실이며 옳은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애국으로 민족 운명의 희망을 찾자.(이름 : 김동환 / 주소 :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 98년 10월 31일 나우누리 기획마당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서명'란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당장이라는 말이면 되겠지요. 국민의 정부 이거 많이 반성하고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일제 잔재 구시대 유물 반통일악법 절대 국가보안을 할 수 없는 국보법을 철폐하라!! 절개와 지조의 상징 양심수를 석방하라!! 열심히 투쟁합시다.(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 유전공학과 3학년 전관석, 98년 10월 17일 나우누리 기획마당 '양심수 석방·국보법철폐 서명'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 노동자들의 참여가 핵심이다

이우봉
재판 계류 국제사회주의자

이 글은 국가보안법의 법리적 허구성을 비판하는 데 중점이 가 있지 않다. 그러한 글은 여러 진보적 법학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변호사들이 쓴 훌륭한 글들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50년 동안 남한에서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던 법, 즉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돼 왔다. 그런데도 이 법은 아직까지 존재하며, 아직까지 작동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무려 3백여 명이 넘는 투사들을 구속시켰다.

얼마 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유엔 B규약 제19조 2항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려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밝혀 드러났다.

이러한 반민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서는 이 법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희대의 악법을 철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 억압적 정치 체제의 버팀목

그 동안 국내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여러 국제 단체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김대중도 한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을 싹 바꿨다. 정확히 5년 전 그의 전임자 김영삼이 "집권해 보니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더라"며 태도를 싹 바꾼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김대중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뒤늦게 출발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을 초착취·초억압해야 했다. 이 나라의 지배자들은 30년간 군사독재를 통해 세계 시장을 향한 자본축적을 조정하고, 자본의 노동 착취를 증대하기 위해서 정치적 억압을 수행했던 것이다. 북한과의 냉전 유지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억압에 도움을 주었다.

비록 지금 남한 경제가 그 나름으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에서 보듯이 여전히 취

약성을 안고 있고, 세계 시장의 조건들도 더 불리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남한의 국가 형태 역시 과거 정권이 물려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어느 정도 온존시킬 수밖에 없다.

물론 제정 러시아식 전제군주제나 나치 독일식 파시스트 국가 또는 30년간 유지돼 온 과거 남한 군부 독재처럼 자본가들마저 억압하는 국가 형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나라 지배계급은 1987년 6월항쟁과 그에 뒤이은 7~9월 대중파업을 기점으로 지배 전략을 부분적으로 변경할 필요에 직면했다. 이것은 부분 개방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김영삼 '개혁'과 지금의 김대중 '개혁'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전략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권위주의 전략에 비해 '실득'의 요소를 다소 강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는 전통적인 억압 구조를 온존시킴으로써 아래로부터 치솟아오르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제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김대중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위기, 즉 심각한 경제 위기는 권위주의적 억압 장치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인권 국가'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일이다. 실로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미사여구와 억압적인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최창동 교수는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하면서도 바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반자유민주적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수없이 많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반민주적 규정들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악법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준법 정신을 강요하는 논리는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해 9월초 고용안정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18일째 파업을 벌이던 만도기계에 김대중 정부가 헬기와 굴착기, 지게차 등을 투입해 농성 중이던 가족과 노조원 2천3백85명을 강제로 연행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만도기계의 한 노동자는 "정문에서 농성 중인 가족들을 전경들이 짓밟고 지나가 7개월 된 임산부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유산되기까지 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정부란 말인가." 하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만행은 노동자 대중이 광범하고 단호하게 저항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 운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조건, 즉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압력 때문에 김대중 정부의 억압적 성격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날이 갈수록 그 법의 진정한 계급적 성격, 즉 반노동자적 성격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지배자들이 억압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국가보안법이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과 민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월간 《사람과 일터》 주간 허명구 씨가 1995년에 열렸던 광복 50주년 기념 인권 심포지엄에서 "실로 국가보안법은 법 이전에 하나의 체제라고 불려야 할 만한 것이다."는 말은 이런 점에서 매우 올바른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 하 국가보안법의 기능

그러나 최근 김대중 정부는 국내의로부터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조건이 무르익으면 약간 손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공안 세력의 중앙기관지답게 즉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비꼬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역겨운 주장을 늘어놓으며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썩기를 박으려 했다.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 적용의 '자의성' 때문이었다. ...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으니 이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1998년 10월말까지 311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하루에 1.24명 꼴로 구속된 것이다. 수배자도 1백82명에 이른다.

이것은 김영삼 정권 초기와 견주어 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되레 4.6배 늘어난 것이다.

한 인권운동가는 "마구잡이 구속이라는 면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겨레>는 이를 가리켜 "대통령의 인식과 거리 먼 현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김대중 정부가 이 나라의 높은 계급투쟁 수준으로 말미암아 그의 전임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한총련 등 좌파에 대한 탄압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안기관들이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무리한 실적 쌓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참으로 그릇된 주장이다.

<인권하루소식>에 인권 시평을 쓰는 오창익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도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길> 1998년 7월호에서 "우리 모두가 21세기로 나아가고 있는데, 유독 한총련은 긴급조치 시대나 가능했을 온갖 탄압을 다 받고 있다."고 울게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학생들을 때려잡아야 할 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의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공안들은 달은 쳐다도 안 보고 죽어라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며 한총련 탄압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공안기관의 "본능"으로 돌렸다.

이러한 주장은 체제의 논리—즉 지배자들 모두가 노동계급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 나라 노동자 운동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1997년 1월 대중파업은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대중파업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중요성뿐 아니라 정치조직, 즉 노동자 정당 건설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에도 경제위기의 부담을 자신들에게 지우려는 시도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새 정부 들어 최초로 격렬한 투석전을 벌인 메이데이 집회, 1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5월말 민주노총 파업, 해당 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킨 퇴출은행 노동자들의 파업, 정리해고를 놓고 한판 격돌을 벌인 현대자동차 파업, 5만 명이 넘게 참가한 1998년 민중대회 등은 이 나라 계급투쟁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생생한 증거들이다.(불행히도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투쟁들은 나를 얼마나 흥분시켰던가!)

이뿐이 아니다. 한 달이 넘게 파업 투쟁을 벌인 삼성자동차 노동자들, LG반도체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망한 지 올해로 80주년이 된 독일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지적대로, 삼성자동차와 LG반도체처럼 뒤늦게 출발한 경험 없는 노동자들의 생사를 건 싸움은 조직되고 경험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활력을 주어 더 거대한 투쟁, 즉 대중파업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 때문에 공안세력이 날뛰는 것이다. 공안·수구세력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까 봐 또는 정리해고를 당하기 싫어서 좌파를 탄압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급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김대중 정부와 공안 세력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김대중은 작년 5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26명에 달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바꿀 기미를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말과 행동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어느 국가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수감할 것이다.(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신문 <노동자 연대>의 지난해 메이데이 호의 1면 헤드라인은 "김대중은 노동자의 적이다"였다.)

김대중의 이 말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공안 탄압을 단지 수구세력만의 준동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좌파에 대한 탄압에서 김대중과 공안·수구세력은 완전히 한몸이다. 즉, 이 나라 지배자들 일반이 전투적인 노동자들과 관련 맺으려는 좌파를 탄압함으로써 노동자 운동이 정치화하려는 것을 애초에 싹부터 제지하려는 것이다.

좌파에 대한 이러한 마녀사냥은 단기적으로 노동자 운동을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

지난해 7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월 파업 이후 최초로 연대투쟁을 결의하자 김대중 정부가 갑자기 '북한의 위협'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간첩 사냥에 나선 것도 노동자 운동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간첩 사냥은 민주노총이 파업을 철회한 7월말을 고비로 소리로 없이 사라져 버렸다.

김대중 정권 1년 동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4백여 명의 전투적인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구속·수배됐다. 이것 역시 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좌파 마녀사냥이 서로 유착돼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물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권리들은 국가보안법과 상충한다.

최근에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가보안법은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잇따른 민중봉기-4·3 제주항쟁, 10월 여순항쟁 등—에 위기 의식을 느낀 이승만 정권이 민중항쟁 참여자와 남로당원 등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었다. 처음부터 국내 노동자·민중 운동과 좌파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과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의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국가보안법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게다가 지난 9월 김대중 정부는 "경제 위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용도가 노동자 운동을 억압하는 데 있음을 실효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경제위기와 무슨 상관인가...국가보안법과 경제 위기를 굳이 연관 짓는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경제 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억누르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뿐이다." 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진정한 표적은 무엇인가

그 동안 이 나라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의 반노동자·반민주적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들은 북한이 계속 간첩을 남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 지배자들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간첩은 매우 드물다.

1987년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간첩죄'에 해당하는 3조로 구속된 사람은 전체의 1.2퍼센트밖에 안 됐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권, 48쪽)

게다가 대다수 간첩사건은 이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보듯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온갖 협박과 고문을 통해 조작된 것이다. 민가협은 1989년 12월 당시 복역하고 있던 2백여 명의 '간첩' 가운데 최소한 1백여 명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간첩사건 조작증언 자료집>).

더 분명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얼마 전 정주영과 그 일가족들은 소 5백 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정주영이 끌고간 소 5백 마리와 경제 협력 계획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무척 이롭게 했지만, 정주영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기는 커녕 화해의 사신인 양 칭송받았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방북했던 한총련 학생 황선 씨는 남한으로 돌아온 뒤 곧바로 감옥에 갇혔다.

199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만들어 지배자들의 북한 접촉을 완전히 허용했다. 그러나 남한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다.

1989년 8월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씨는 오랫동안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박철언은 그 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88년에는 서울대 학생들이 "김일성대학 학생들과의 체육대회"를 제의했다가 총학생회 간부들이 모

두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렀다. 그런데 얼마 후 정부 당국자들은 스스로 '남북학생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좌파계 운동에 대해서만 어김없이 적용돼 왔다. 만약 그 사람이 정부 편에 선 사람이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런 계급 차별적 법 적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신념단속법이란] ... 분리의 법률이며, 분리의 법률은 죄다 반동적이다. 그것은 결코 법률이 아니며 하나의 특권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행해도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 그의 선량한 생각과 그의 신념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프로이센 검열 훈령에 대한 논평>, 1842년.)

똑같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던 통일 전 서독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자유 제약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독에서는 1949년 군인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까지 보장됐다.

반면, 분단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도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단 상황이 그럴듯한 핑계거리는 될지언정 진정한 이유는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더구나 김대중이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된 북풍·충풍 등의 사건을 통해 남북한 지배자들이 그 동안 압제에 한통속이었음이 밝히 드러남으로써 북한의 위협 탓에 시민적·정치적 자유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의 허구성은 철저히 폭로됐다.

그래서 지배자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 근거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요 거짓이다. 1996년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인간의 권리는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고 못을 박은 바 있다.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도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 우선 논리에 대해 "유엔의 인권규약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런데도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민의 압도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논리의 진짜 목적이 한층밖에 안 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있음을 입증할 뿐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반통일성"으로 꼽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국가보안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남북한 민중의 자유 왕래를 가로막는 데 있다는 것—그리하여 남북한 노동계급의 연대와 우애를 가로막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남한 지배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보다는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적—즉 노동자 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조직—을 억누르기 위해서다.

전 안기부 차장 정형근은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국가의 존립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준동하고 있는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와 발본색원이라 할 것이다. (<WIN> 97년 10월 호.)

실제로 지배자들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심지어 노동조합 권리까지 억압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건설하려 한 교사 노동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해 온 게 바로 그 증거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80퍼센트 이상이 제7조(이적단체 결성, 찬양·고무 등)로 구속됐다

는 사실(<국가보안법 연구> 2권, 48쪽)에서 국가보안법이 핵심인 7조를 통해 북한과 아무 연계도 없는 체제 비판도 봉쇄하려 함을 알 수 있다.

대체 입법 역시 좌절돼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최근 국내외의 압력에 떠밀려 국가보안법을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그 가능성에 관계없이 이는 결코 일보전진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난 1991년 5월 31일 노태우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손질하면서 소위 '사회주의'—실제로는 국가자본주의에 지나지 않았던—소련과 동유럽의 몰락으로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동조하는"이라는 구절을 없애는 대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오히려 개악한 것이었다. 이 때 김대중의 민주당은 그 개정안이 통과되는 자리를 슬쩍 피해 줌으로써 개악을 방조했다.

그 결과 "북한을 찬양·고무"하지 않았던 국제사회주의자들, 역사노, 노해투사, 노정연 등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으로 탄압받기에 이르렀다.

김대중의 평민당이 1989년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바로 이 때 개악된 국가보안법 제7조를 더욱 정교화한 법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질서수호법의 제4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조국 씨는 과거 김대중의 "[국가보안법] 비판의 기초에는 '국가보안법'이 '정권보안법'으로 남용되었고 '가짜 빨갱이'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문제이며, 동법을 잘 고쳐서 '진짜 빨갱이'만 처벌하는 '진정한 국가보안법' (?)으로 운용하자는 주장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조국, <사상의 자유>, 살림터, 14쪽.)

김대중 정부가 압력에 떠밀려 만의 하나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 법은 과거 평민당 시절의 민주질서수호법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민주질서수호법의 도입에 대해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적행위자에 대한 처벌에서 반민주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한 바 있다.

민주질서수호법은 노동자·민중 운동이 자유주의 정치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교훈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자유주의자들은 극도로 소심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자인 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과제들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돼 있다. 이 나라 자유주의 정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노동자·민중 운동이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싸움을 자제한다면 결국 다시 한 번 쓰라린 배신만 맛보게 될 것이다. 지난 여름 김대중 정부가 사상 전향제도를 준법서약제로 대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했던 것처럼 말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은 김대중에게 반대해 싸울 때만 자유민주주의의 권리라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어떻게 가능한가?

정리하고·임금삭감 반대 투쟁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운동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 하나에서 밀리면 다른 하나에서도 밀리기 쉽다.

지난 1989년 봄 노태우가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빌미로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하면서 노동자 운동이 90년 봄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던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런데도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이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에 진지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을 분리해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지지를 보냈던 경우는 기껏해야 성명서를 배포하는 정도였다.

여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동안 남한 정권은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아주 계산적으로 선별해서 진행했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자 운동이 별 상관없는 양 위장하려 했고, 노동조합 운동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 지배계급의 이러한 책략에 일정 타협해 왔기 때문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예를 들어보자.

지난해 4월 한국통신 광진지부 조합원 오동진 씨는 자신의 집에서 PC 통신에 마르크스주의 선전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돼 구속됐다.

기성 언론은 오동진 씨를 PC 통신을 사용하는 한 개인으로 취급했지 그가 한국통신 노동자이자 열성적인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또한 그가 PC 통신에 마르크스주의 선전물뿐 아니라 한국통신 노동조합 투쟁에 관한 글과 다른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지지하는 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을 침묵했다.

한편,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오동진 씨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조직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가 집행유예로 석방돼 노동조합에 찾아가 복직 투쟁을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한국통신 노동조합은 그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한동안 실업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선천성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끌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오동진 씨에 대한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태도는 유감스러운 것이다.

노동자 운동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정치 좌파를 분명히 방어하고 국가보안법 같은 중요한 정치 쟁점들에 기권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을 날려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싸운 덕분에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거의 쟁취했다. 또, 비록 완전한 노동조합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성도 쟁취해 냈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지난한 투쟁에 의해 쟁취한 것이다.

똑같은 힘이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거리에서 발휘하는 힘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운동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자들은 10여 년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마침내 1990년 초에 정치적 자유—만델라 석방과 아프리카민족회의(ANC) 합법화 그리고 공산당 합법화—를 쟁취했다.

1989년 폴란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 노동자들도 보안법을 없애 버렸다.

·1974~75년 포르투갈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포르투갈 노동자들은 방송국을 점거해 자신들이 운

영할 정도로 혁명적인 투쟁을 통해 과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운동의 합법성을 쟁취했다.

·1974년 그리스에서도 2백만의 아테네 노동자들이 총파업—말 뜻 그대로 대부분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총파업—에 돌입해 군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적 권리들을 쟁취해 냈다.

여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이 자유민주주의적 정권을 세우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투쟁들은 자유민주적 요구들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획득하려는 투쟁이었다.

이것은 자본가 계급의 그 어떤 부분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본가 계급 전체에 반대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쟁취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운동도 김대중의 교묘한 말—예를 들어, 대체입법이나 준법서약제 따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미사여구를 조금이라도 신뢰하지 않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완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쟁취할 수 있다.

요컨대, 지금 우리는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조직하는 데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

독일의 법학자 라트브루흐는 “악법에 복종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하고 잘라 말했다. 이 말은 악법이 아무리 모양새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진리이다.

우리 나라 노동자·민중 운동 역시 지난 10년 동안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훌륭한 소중한 전통을 세워 왔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전교조가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도 바로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악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어겨 가면서 싸워 온 결과다.

이러한 투쟁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이런 우리 투쟁의 전통은 기꺼이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 바탕을 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 속에서만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개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기본적인 실천적 행동지침들을 정리해 보자.

하나. **국가보안법 철폐와 대체입법 반대**라는 요구를 명확히 내걸고 싸워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김대중 정부의 국가보안법 손질 움직임에 희망을 걸고 캠페인의 수위를 낮춘다면 과거 1991년 5월 국가보안법 개악처럼 오히려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다.

둘.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정치수가 전원 석방되는 날까지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공동 투쟁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시적이고 문화성 행사에 치중하는 공동 기구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반나치동맹은 영국에서 파시스트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반나치 캠페인과 거리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현장 노동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 기구가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 최대의 약점은 국가기구의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서로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자민련, 한나라당 등 기성 정치권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여부, '민주질서수호법'의 수위는 정계 개편 과정에 참여하는 각 세력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국민회의와 거래할 세력이 다분히 수구적이거나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개정법의 실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2. 80~90년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문제점

고르바초프 방한 직후부터 반공이데올로기는 급격하게 이완되어 왔다. 이러함에도 아직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못한 데는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이 표현하는 운동상의 특징이 내재해 있다.

1) 이념적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했다

많은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구속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물론 지나치게 자의적인 법적용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사실 행위를 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이 불순시하는 양심을 펴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여 지지하지 않아야...

즉, "나는 무고하다"는 외침에는 "국가보안법은 정당할 수 있다"는 논리상의 후퇴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실정법과 과업을 무시하고 재판을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자세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서조차도 일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보안 당국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양산하게 하는 빌미가 되어 왔다.

2) 소수 피해자운동으로 고립시켰다

국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은 뭘지 무섭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법으로 인식돼 있는데, 이런 인식에는 보안 당국의 선전 공작 뿐 아니라, 투쟁 주체들의 자세도 일조했다. 지난 시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교류를 가로막는 법'으로 규정. 국가보안법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선전된 내용은 "조국의 반쪽을 찾는 데 누가 가로막는단 말인가" 류의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정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보안법은 해마다 방북하는 운동권 대학생들을 막는 법"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유포했다. 즉, 국가보안법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더 본질적 내용은 야기... / 영화 담겨 / 남수감 권력**

둘째, 해당 당사자 운동으로 고립. 국가보안법 철폐는 자유권적 시민권의 문제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승인하는 모든 세력의 투쟁 과제이다. **전통적인 민족민주운동뿐 아니라, 시민운동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은 실천되지 않는 당위일 뿐으로,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한다는 단체조차도 일상적인 시기에 일상적인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끌어 안지 못했다. 솔직히, 그 동안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특정한 시기에 조직 침탈을 당한 단체들의 우연적 결합, 품앗이에서 그다지 멀리 나아가지 못했다.

셋째,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기능을 규명하거나 폭로하는 데 실패. 모든 법은 특정한 집단 또는 계급의 특정한 사회활동을 제어하거나 조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국가보안법 역시 반정부 세력의 도전과 노동자들의 반자본주의 투쟁을 봉쇄하는 데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실질적 피해**

광범위한 피해자 이야기
노동권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국가법 문제제기를
당했어...

자인 광범한 민주주의 세력과 민주노동운동 세력을 규합하는 데 실패했다. 사회적 집단과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활동가들만의 고민거리일 뿐이었다.

3) 거대들에서 당위를 반복했다

'운동권'의 여러 투쟁이 그러하듯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역시 투쟁 목표를 여하히 달성할 것인가보다는 공동 틀을 짜고, 이견을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소진하여 왔다. 또, 전략 목표를 향한 세부 전술의 배치보다는 전략 목표의 반복 선언에 안주했다.

3. 99년 투쟁의 목표와 과제

1)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의 인식 전환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 그 기능에 대한 규명, 철폐 투쟁을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2장에서 지적한 경향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국민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다.

2) 특화된 단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우선 초동 주체부터 형성해야 한다. 최근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는 과제에 기동성 있게 임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차후에도 외부에서 돌출적으로 주어지는 당위적 과제에 휩싸이거나 전선을 확대코자 하는 욕구에 빠지지 않았으면 한다.

근래 민주질서수호법에 대한 물밑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국가보안법 철폐' 이외의 다른 어느 것도 아니다. 그러나 주체적 역량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선언적 목표에 얽매어 있을 필요도 없다. 대체 입법에 대한 대비, 입법 과정에의 개입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강고한 권위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다.

3) 운동 주체를 형성하고, 다양성을 인정받자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요체는 소수의 피해자 운동에서 다수의 억압집단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더 풍부하고 친밀한 논리를 개발하고, 선전하자. '보통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인식을 주자.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은 우리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의 한 수단인 한편, 그 자체 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상과 양심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사상에 수반되는 실천 활동을 용인받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민주주의라 칭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일반화시켜야 한다.

모든 '운동권'이 다름 합쳐도 국가법
법은 투쟁 생명이다.

정세에 수회개혁을 위해 '다수'가 인물이 제일 많다.
비밀로, 대안적인 사회 변혁 모색하는 중입니다.

49년 이경지(경사) (반공) 다대고 권익을 선택하도록 하자.

정치·사상의 자유와 정치개혁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되어야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되어야

청년진보당 정책국

1.

UN이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을 판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반국가단체' 사건이 발표되었다. 이 '영남위원회' 사건은 DJ와 법무부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와중에 수면에 떠올랐다. 한편, 지난 1월 23일 역대 정권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과 민가협이 오찬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가협은 국가보안법, 국가 인권위원회 건설, 양심수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였다. DJ는 국가인권위 건설요구를 수긍한 반면, 준법서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수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처리형태와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국가보안법 처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¹⁾

영남위원회 사건과 DJ-민가협 오찬 모임은 정권의 세련된 강·온정책의 단면이다. 즉 한쪽으로는 좌익운동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구·보수 세력뿐 아니라 '좌익세력을 제외한 재야운동'을 포섭하려 한다. 이제 이 움직임은 '제2건국운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반국가단체라는 엄청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남위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전 정권처럼 조직사건으로 생점화하면서 정국을 돌파하는 무리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국가보안법은 현정권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국가보안법은 국가수호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정적(政敵)의 효과적인 제거의 수단으로, 때로는 정국운영의 돌파구가 되는 크고 작은 간첩, 조작사건을 양산하며 통치세력에게 이바지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보수세력 달래기와 운동진영의 분열조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준법서약서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틀거리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권의 현 주소이다.

국가보안법의 변화·발전에 따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도 변화해 왔다. 즉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군부정권 하에서 반정부투쟁과 동치되어 왔으나, 최근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권문제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에 접근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얼마전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한 한 시민의 고소가 원고승소로 마무리되었듯이, 인권유린에 대한 당당한 대결과 정당한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인식을 보편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1)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어질 것인지 낙관할 수는 없다. 어찌되었든 DJ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햇볕 정책과 북한 정권을 최대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은 양립될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여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문제는 인권문제 차원에서 완결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이미 정권은 적극적인 인권정책의 표방과 이미지 메이킹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는 김현철 석방이 관건이 될 3·1절 대서면설, 국가인권위원회 건설 등이 그 예이다. '반인권'을 주창하는 정치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인권향상 슬로건은 운동진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권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악의적 적용이 파생시킨 여러 부작용들 중에 하나이다. 둘째, 중요하게는 국가보안법이 가장 문제삼고자 하는 것, 정권이 준법서약을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저 북한정권로 동일시되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DJ정권에게 다양한 정치·사상의 개진과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을 일구어낼 준비가 되지 못한 반증이다.

1999년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새로운 국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인권보장을 포함한 제반 민주주의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침투되기 위한 기본전제는 바로 정치·사상의 표현과 침묵, 그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의 개혁슬로건들은 앙꼬없는 찐빵일 뿐이다.

2.

국가보안법은 정치개혁의 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민회의는 늦어도 4월까지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치개혁-정계개편이 맞물려 있는 99년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개혁은 한국정치의 문제가 제도의 한계에 있다고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 정치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정당마다 정치개혁을 해석하는 것도 다양하다. 자민련은 정치개혁과 내각제 시행을 등치시키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정치개혁을 자신의 취약한 지역기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도입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역시 주요하게는 영남권 진출의 유리한 교두보를 형성하고 지역연합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계개편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는 보수정치권 내부의 정치적 기반 확대를 둘러싼 권력투쟁일 뿐이다. 이 속에서 정치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사장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방도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정치개혁과 연관시키지 않는 현실정치의 태도이다.

최근 최장집-조선일보 논쟁은 한국의 정치가 어떠한 문제에 긴박되어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최장집 교수가 '좌파'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반공주의자들은 '좌파'가 '제도 속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사상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은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조선일보에 의해서 상품화되며,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이 된다. 이 이념적 기반을 법적 제도적으로 확정해주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한국사회의 이러한 사상적 기형성은 사회를 모든 측면에서 '불구화' 시키며 진보세력이 '정치적 주체'로 자립하는 것을 심각하게 가로막는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명확한 정치적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반공적 규율'의 초법적인 도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할 어떠한 법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도덕에 대한 폐기이다. 진보정당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이해는 지배계급의 그것과는 대개의 측면에서 배치된다. 일례로 지난 97년 총파업 당시 보수 언론은 총파업의 배후에는 이를 선동하는 '붉은 세력'이 있다며 이 파업은 순수한(?) 파업이 아니라 좌경세력에 의해서 주도되는 파업이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었

다.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에게 있어서 보수 우익이 아니면 모두 빨갱이다. 다시 말해서 반대세력은 모두 빨갱이인 것이다. 결국 보수정치세력은 사상적 기형성을 그들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유지하고 이와 쌍을 이루는 지역감정을 정치적 존립기반으로 삼아 한국사회를 통치하고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일년에도 수십번씩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좌경 용경세력 검거'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좌경용공세력이 존재함으로 인해 국민들은 1년 내내 사상적 검증과 재교육을 받게 된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여기서 존재의 근거를 찾는다. 정치·사상에 대한 무의식적인 검증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반공규율사회는 이렇게 다시 국가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좌경 용공세력의 존재로 인해 순식간에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일상적 사상검증의 도구로 작용한다.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그대로 둔 채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보수정치권만이 정치 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한 게임을 위한 룰을 더욱 정교하게 하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진보적 정치세력이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존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틀 내에서는 이념적 우경화를 반드시 강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진보적 정치세력이 아니고서는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문제성을 한국사회에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힘들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역설적인 비극, 분단체제가 드리워준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진보정당은 전진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한 정치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가장 먼저 철폐되어야 한다.

3.

다가오는 새 세기를 진보정치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민주주의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여내는 투쟁과 직결된 것이다. 인권옹호의 접대기를 뒤집어쓰고, 사상적 잣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치지형을 통해 우위를 점해온 보수 기득권세력에게 민주화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전망은 전혀 없다.

다양한 정치·사상에 기반한 정책, 이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새로운 시대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 진보정당운동의 몫이다. 하나의 일정으로 예고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개혁은 분명히 정계개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운명이다.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진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국가보안법에 메스를 가해야 하는 지금, 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진영은 민주주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그 시작점이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법 자체의 철폐'로 한계지워지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시하고 최악시함으로써 반공규율에 길들여진 이 나라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58년 진보당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권의 정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후진성의 근거에 항상 도사리고 있던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타이 정부는 냉전시대 초기인 지난 52년에 도입한 반공산주의법(반공법)들을 모두 폐지하기로 30일 결정했다.

타이 정부는 이날 내각 회의에서 5종의 반공법들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곧 국회에 반공법 폐지를 위한 입법절차를 밟아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국제 인권기준과 타이 헌법에 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 (한겨레신문 12. 31. [방콕=외신종합] 인용)

사실보도에 그친 이 기사를 가지고, 타이와 정치현실이나 대체입법 여부, 철폐의 과정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한 발자국 더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과, 어떤 과정이었던지 그 결과물은 해당 국민들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함께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연명의 편협성에의 접근.

DJ도 연명이야기.. / 차별성은 두기 어렵다.
강박한 연명이야기.. /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문제를 담지 못한다.
의 연명

우사하는
비정상적 반공규율사회.

우익의 의식에 남아 있다.
→ 사회정당에 의식개혁
의식개혁

○ 권투쟁의 방향.

국보법 폐지만이 문제될 것이다.
(1978)

→ DJ 집권으로 반공법 철폐 운동은 '제1'인사합의 → 반공법 철폐
대립의 양면 개략으로 대립이 있다. / 사상지향 → 중립사상
민주주의의 실현을 전제하지 않는 지도와
각정기대에게 요구를 주는 것은 생각해야 한다.

사후. 신언어대항, 투쟁. 연대. 권투쟁. 연대. / 이시했거나
권투쟁, 권투쟁 → 반공법 철폐 투쟁으로 연대 권투쟁이 있다.
(이상 권투쟁) "국적 자의적 권투쟁은 투쟁으로"
다양한 부분 연결. 권투쟁에게 권투쟁을 권투쟁이 있다.. 권투쟁이 있다

국가보안법.. 다양한 증거. 예시를
통해.
이제까지의 투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모는 연대. 가장 반공법 철폐
필요한 확립 / 연명이야기. 불의의 희생자가 아니어야.

정다. 각정기대... 권투쟁...
연명위원회. 연명이야기.

표. 통일... 등 다양한 분야

/ 민주권 내에도... 정치·사상의 자유와 정치개혁, 국가보안법 철폐부터 시작되어야 - 청년진보당
사상지향과 사상 지향은 많고 연대해야 한다.
↑ 국가

한국판 마녀사냥, 그 천박함에 대하여

우선 헌법 제1조 이야기

사복경찰의 일상적 대학 사찰, 영장없이 자행되는 체포와 구금, 총기 사용, 협박과 회유에 의한 탈퇴 강요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고 축포를 쏘아올릴 때의 '김대중'에 대한 일말의 미련을 비롯이라도 하듯, 대학가의 마녀사냥은 더욱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96년 연대항쟁 이후, 우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이적성을 규명(?)하지 못한 정권이 편의적으로 우선 한총련 산하 조국통일위원회에 대해 이적단체 결정을 내린 후 97년 5기 한총련 출범식 이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그리고 6기에 이은 7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으로 계속되어 정권의 한총련 와해 공작은 벌써 4년이 되어 간다. 그 사이 50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행되었지만, 그들은 당시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았던 6기 한총련 건설 논의 과정에서부터 탄압으로 일관하며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 가해지는 탄압은 '국민의 정부'가 무색하게도 더욱 교묘하고 비인간적인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대학내에 상주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며, 이제 언제 어느 때라도 학원이 군화 발에 의해 짓밟혀질 수 있다. 정권과 공안세력이 문제삼는 것은 여타의 범죄행위보다도 '한총련'에 대한 부분이었다. 단지 한총련 건설에 동참했다고 해서 그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학생회의 기본질서마저 파괴한다. 그들은 건전한 학생운동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결성된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마구잡이로 '해체시키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 논의의 장부터 막아 나서기 시작했던 지난 6기에 이어, 7기 한총련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회장 후보들에 대한 검거까지 ... 5기 한총련 이외에는 어떠한 사법적 판단이 유보되어있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보다도 먼저 공안세력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보다도 우위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공안세력의 이같은 탄압의 유일한 근거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한총련의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것과 흡사하다는, 그렇기에 이적단체라는 초법적 주장에 따른다.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의 주장으로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것들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굳이 한총련이 친북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논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분단 이데올로기로 자신을 얽매는 하나의 근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분명한 근거가 아닌, 둘이 닮았기에 둘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국가보안법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공안적 상상력의 현실화에 불과한 것이다.

반복, / 귀찮다. 우의 사상과 실패. 재단. 김영삼이 이노라도 이데올로기... 적들의 손에 들어갔다.

국내 경찰들이 수로 망. '건전한 학생운동' - / 김중호

한총련은 분명 정치조직이 아닌 대중조직이다. 이것은 한총련이란 조직이 폭넓은 대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권은 이것을 무시하고 한총련이란 조직을 대의원 개인개인으로 한정시켰으며, 또한 듣도 보도 못한 임의탈퇴라는 것으로 한총련을 탈퇴/불탈퇴 구도로 양분시켰다. 공안세력들은 한총련으로부터 건전한 학생운동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탈퇴라는 형식을 제시하며 구제약 길을 열어준 양, 친절을 과시해왔지만 실상 이들의 이런 친절은 한총련을 안에서부터 사본오열하게 하여, 그들이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도 세력들을 포착하게 하는데 있었다. 즉, 대중 조직인 학생회의 연합체인 한총련을 단순히 개인과 개인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로 한정지음으로써, 자신들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한총련은 선거를 통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대의원자격을 인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임의대로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한총련 탈퇴문제는 이렇듯 민주주의의 초보적 교과서마저 부정하며 학생운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한 사람의 신념과 가족간의 신뢰마저 무시하며 진행되는 '한총련 탈퇴 공작'은 이제 정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하게 폭로하고 있다.

97년 이후 98년에 접어들면서 한총련 탄압은 그 정도를 더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름시기 명동성당에서는 80여 명의 대의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경찰에 의해 협박과 회유에 시달렸다.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문제삼지 않겠다, 구속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말에 혹하신 부모님이 자식을 끌어대고 자식은 나가지 않겠다며 나무동치를 부여잡고 울부짖는 장면이 하루에도 수차례 연출되었으며, 부모님을 배웅하던 대의원들이 밑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으며, 먼 친척이라며 사복경찰이 따라와서 부모님을 협박하는 것을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던 대의원들이 더위보다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결국 탈퇴서를 쓰라는 부모님의 손을 맞잡지 않았다.

공안세력은 한총련을 '좌경용공', '폭력', '살인', '패륜'이라는 혐오어로 대중에게 왜곡하고 있다. 이는 한총련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총련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 명, 백 명에 대한 처벌은 쉬워도 이천 명이 넘게 된다면 실제 처벌이 어려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학생운동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의 힘으로 모아진다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총련 탄압에 대한 문제는 비단 한총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학생운동의 역사에 대한 왜곡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총련 탄압의 본질은 표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친북'이 아니라, 바로 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이며 파쇼적인가에 있으며, 얼마나 사회로부터 학생운동을 격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총련은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하는 정권에 반하는 반정권단체는 될지언정 민중의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은 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없다.

현재 한국사회의 변혁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족쇄처럼 지워져있는 국가보안법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경찰서에 탈퇴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함께 그 악법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남북은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기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금강산을 한국 기업이 개발하기도 하고, 경협이 진행되기도 한다. 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게 하는 조항인 영토조항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에서 민중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주주권, 심장의 염. 강의시간과 함께 우리국민정수 : 이적단체의 반국가행위, 재판상다정화. 전역명. 언론이 알려졌던. 재판대법원판. 내용은 / 염서의 무게 등...

문제는 남북의 관계에서 모순되는 이러한 법규정에도 있지만, 이러한 법규정들이 철저히 정권의 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사람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며 추상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대로 해석되어 적용되어 왔다. 형법에 보면 내란이라든가, 폭동 등 국가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든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배세력은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할 형법보다, 이리저리 엮어매기 손쉬운 국가보안법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반정권의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었다. 정권의 입장에 수궁하는 재벌이나 기업가, 정치인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노동자 등 사회비판적 세력으로 정권의 비민주성을 폭로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적용된다. 이는 사회비판적 세력들이 친북적이건 반북적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데서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결국 이복단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지 않았음을 눈치채게 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상의 통일 조항이나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이미 사문화 되었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반하는 세력의 탄압을 위해 이용되는 법으로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탄압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여타의 법적 보호로부터 격리된 채 진행되는 근대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압적 조작 수사와 자의적 재판은 인정될 수 없으며, 해마다 새로이 구성되는 한총련에 대한 사법 측의 어떠한 판단도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총련에 대한 공안세력의 탄압은 철저히 공안적 상상력에 기반한 마녀사냥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사상을 검열하며, 정권 유지에 득이 되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존재 이유가 있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많은 양심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상을 스스로 검열하여 알아서 침묵하게 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국가보안을 위해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이며,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더라도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에 불과하다.

정권 유지를 위한 사상재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존속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형법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통일에 관한 부분 역시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히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대체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하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 한국 사회의 법적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이다.

제2부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탄압받았는가



신년 철회 강요와 사상재판에 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사상은 엄지검으로 하게 하고
나... 지미 하노고.

권력에 대한 저항력을 위한 재판의 희생양..
적부.

권력. 법집사가 어찌어찌해서 재판.
권력은 어찌, 재판 사상이 아무것도
의미 없음..

국제사회주의자 조직 탄압 역사

1990년 9월 1일 조직을 결성한 이래로 1998년까지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여러 차례 경찰의 습격을 받아 왔다.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탄압은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와 '국민의 정부'라는 지금의 김대중 정부에 와서도 그칠 줄을 몰랐다.

노태우 정권 때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보안경찰들은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에 지속적으로 침투를 침투시키고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습격해 왔다.

노태우 정부의 탄압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다.

1990년 9월 1일 네 명의 토론 씨클에서 시작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1년 8월 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곧이어 민중의 저항으로 쿠데타를 좌절시키는 세계적 사건이 벌어지자 급속하게 성장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조직 건설 당시부터 소련 쿠데타가 일어날 때까지 줄곧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북한과 같은 국가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관료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의 변종인 국가자본주의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남한과 서방 세계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들에서도 노동자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련 정치체제의 붕괴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의 국가자본주의 이론이 옳바름이 입증되는 중요한 기회였다. 당시 좌파가 소련 쿠데타를 전후로 완전한 사상적 혼란에 빠져 표류할 때 국제사회주의자

들은 그 동안 강조해 온 국가자본주의 사상을 열정적으로 선전하면서 급성장했다. 조직원 수는 쿠데타 직전에 29명에서 3개월 뒤 150명으로 성장했다.

이런 성장에 기초해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1년 겨울에 접어들면서 정책의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1992년 봄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만큼 노동자 투쟁에 개입을 하기로 정책 전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운동과 만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도 전에 경찰은 엄청난 공격을 가해 왔다.

1992년 2·22 사건

1992년 2월 22일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한 지부가 경기도 대성리의 한 민박집에 모여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들'과 '여성해방'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었다. 그 때 경찰이 들이닥쳐 이들 20여 명을 연행하면서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 대한 탄압은 시작되었다.

당시 구속자들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상봉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국제사회주의자 회원들을 미행했고 버스도 함께 타고 쫓아왔다고 한다.

“‘여성해방’ 토론을 마친 후 저녁을 먹고 잠깐 쉬던 중이었습니다. 녹색 점퍼를 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방문을 벌럭 열더니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해 하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죠.

“그 남자는 갑자기 구둣발로 들어오더니 ‘오민환이 누구야? 손들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열러

진 방문으로 형사들 5~6명이 구둣발로 들어왔고 창문 쪽에서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어 댔어요.

“우리는 아차 싶었어요. 크게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밖으로 끌려나와 보니 전경 버스와 봉고차, 그리고 형사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실려 장안동 대공분실로 끌려갔습니다.”

대성리 공격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중순까지 2차, 3차 연행자들까지 40명이 연행되고 21명이 구속됐다. 그리고 조직원 절반 가량이 공식적·비공식적 수배자로 쫓기는 몸이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그 해 대선 직전까지 계속 좌파를 탄압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노동당, 사노맹, 자주학생운동연합, '중부지역당'의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투옥됐다. 국제사회주의자들 역시 2·22 사건 구속자뿐 아니라 7월과 10월에 9명이 더 연행됐다.

2·22 사건의 교훈

1991년 8월 소련 체제 붕괴 이후 급성장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1992년 초부터 적극적인 외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보안을 앞세워 현실 운동에 연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경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보안을 앞세워 온실 화초처럼 내향적이고 수동적으로 되어 버리는 현상(=보안 물신주의)을 비판한 것은 옳았으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비합법 조건에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안을 경시하는 편향을 보였고 그 때문에 탄압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프락치의 파괴공작을 최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프락치는 결정적으로 비밀경찰에게 대성리 정치토론 모임 정보를 제공했고 조직원에 대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해 당시 연행된 동지들이 구속되고 잡히지 않은 동지들까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지도부가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몇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다.

첫째,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이 국제사회주의자들 같은 반복적 혁명 좌파를 겨냥해 개악된 사실—당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더욱 확대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바뀌었다—을 알지 못한 채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국보법 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련과 북한을 모델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할 수 없다고 착각했다.

둘째, 남한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다소 모호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그 이전부터 남한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중간쯤인 모순적인 국가형태—반(半)권위주의·반(半)자유민주주의—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분석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에서는 '자유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정식으로 치환됐고 그래서 지배자들의 탄압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2·22 사건을 겪고 나서야 개념상의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진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즉 전형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는 규정할 수 없다. 남한 국가형태는 오랫동안 반(半)권위주의·반(半)자유민주주의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은 남한에 대해 여전히 전한 적용성을 지닐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반민주적인 동시에 반노동자적인, 말하자면 반(反)영구혁명적인 억압기구라는 사실 자체가 이를 입증한다.” (국제사회주의자들(IS), '지금의 계급세력 균형과 사회주의자의 임무', 《사회주의 노동자》2, 1992년 7월, 27쪽)

셋째, 탄압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성리에서 정치토론을 하다 처음에 연행된 20여 명이 수사기관과의 묵비 투쟁을 하지 않았다.

처음에 잡힌 20여 명은, 장안동 형사들이 '조직표'와 개인 신상에 대해 적혀 있는 프락치의 진술을 보여 주며 진술하라고 협박하자 자포자기했다. 경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한 결과 탄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 40명이 넘는 연행구속자와 10명에 이르는 수배자를 양산했다.

그 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비합법 조건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보안을 익히고 훈련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미행과 잠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부터 경찰에 붙잡혔을 때 최상의 대처 방법이 목비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래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같은 해 7월 29일에 연행된 8명부터 목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 1994년 10월 15일과 1998년 5월 7일에 있었던 경찰의 대습격에도 철저한 목비를 해내 탄압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권 하의 탄압

김영삼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이전 군사정권과는 다른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위선을 떨었다.

김영삼은 1993년 3월 6일, 대통령 취임식을 기념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성 언론들은 이를 두고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단", "구시대의 갈등을 청산하는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가협이 집계한 양심수 514명 가운데 27%인 144명만이 감옥문을 걸어 나왔을 뿐이었다. 그나마 대부분이 만기 출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만기 출소를 이틀 남겨둔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대사면'은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구속자 가운데 박효근 씨만 석방되었고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사람들이 사면·복권되는 식이었다. 실형 선고를 받은 최일봉, 이성복, 이정구, 박진희 씨는 감옥에 그대로 갇힌 채 남았다.

또 김영삼은 군사정권이 수많은 정치적 반대자와 민중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는커녕 "집권해 보니 국가보안법의 필요를 느꼈다"며 국가보안법을 고무·찬양했다.

김영삼 정권 1년 동안 '시국 사건' 구속자 223명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62.4%인 139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단지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로 구속된 경우도 33.6%나 된다. 증거 불충분이나 '죄질'이 가벼운 탓에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에 88%가 집행유예로 석방됐을 정도로 김영삼 정권은 국가보안법 적용을 남발했다.

그 이듬해에 김영삼은 더욱 권위주의로 회귀해 3월 29일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혁사노)과 관련해 4명의 노동자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또 출판물에 대한 탄압도 심해져 일빛출판사와 힘출판사, 그리고 일터출판사 대표들을 구속했고 소설 《태백산맥》까지 기소하려 했다.

6월 중순 이후 불과 보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속당했고 수배자들이 대규모로 양산됐다.

6월 21일까지만도 합법적 집회에 참여하려 했던 남측 학생들을 '열차 탈취범'으로 몰아 110명을 구속했고, 6월 22일 '구국전선' 사건 관련으로 10명이 구속당했다.

6월 23일, 정부는 전기협 농성장에 경찰을 투입해 농성철도원 613명 전원을 연행하고 박상수 전기협 부위원장 등 노조원 18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6월 26일, 검찰은 김연환 지하철 노조 위원장 등 20명과 부산 지하철 강한규 노조위원장 등 간부 10명, 그리고 서선원 전기협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홍을 꼭두각시로 내세워 뿔없는 마녀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었던 김영삼은 웬만한 대학들에 대한 침탈을 밥먹듯 '일상 활동'의 하나로 삼았다. 경찰은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 있는 대학들을 수시로 침입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했고 학교 건물을 닦치는 대로 부수었다. 심지어 국립 경상대 교수들이 퍼낸 강의 교재 《한국 사회의 이해》에 대해 사상 시비를 걸며 경상대 교수들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미 1993년 12월에 국제사회주의자 조직 영남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던 마산수출공단 노동자 심경에 씨를 구속하면서 시작했다.

보안 경찰은 이미 1993년 중반부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집회, 전해투 노동자 집회 등 노동자 집회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노동자 연대〉 신문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망원렌즈를 동원해 사진 채증을 해두었다. 그 이듬해 5월 전노대 주최로 동국대에서 열린 메이데이 집회에서 조직적으로 〈노동자 연대〉 판매자들을 촬영했다.

1994년 봄부터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을 잡기 위한 잠복과 미행이 부쩍 심해졌고 5월과 6월 두 달 동안 9명이 구속됐다.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김영삼의 탄압은 10월 15일 국제사회주의자들 36명을 연행하면서 극에 달한다.

10·15 사건

1994년 10월 15일 오전 8시경 국제사회주의자 조직 전 편지자 최일봉 씨를 비롯한 사회주의자 36명은 갑자기 들이닥친 보안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 36명 검거-체제 전복 목표, 현중·지하철 파업 배후 조종 노학연대 조종

"혁명 정당 건설 결성 기도 23명 구속-국제사회주의자들(IS)과 전국 사회주의 학생 연합 조직 적발, 계급 투쟁 통한 국가 전복 획책, 90년부터 영국 맑시즘 대회 대표 파견

"서울 경찰청은 최일봉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광근수 씨를 군 수사기관에 이첩, 7명 불구속 입건, 12명 수배, 전국 산업체에 침투하여 활동 중인 30명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

"부산 경찰청은 김동철 등 영남위원회 조직원 11명 구속

"전남 경찰청은 정모군 등 전남위원회 조직원 2명 구속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산하 학생 전위 조직인 전국 사회주의 학생 연합을 결성

"현중·지하철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파업을 선동

"대우정밀, 한진해운, 원진레이온 등 10여개 공장의 노사분규 지원 투쟁"

위는 10월 15일 탄압 직후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일간지에 보도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그룹' 사건을 간추린 것이다. 이 기사들은 당시 노동자 투쟁을 일부 "불순 분자"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사회주의자들을 순박한 노동자를 이용해 먹는 사악한 괴물로 그려 놓았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집이나 자취방에 있다가 연행되었다. 이들은 다쳐서 피를 흘릴 정도로 완강히 저항했으나 경찰은 긴급구속장 하나로 이들을 강제로 끌고갔다. 긴급구속장에는 구속 사유도 없이 경찰 수사책임자의 도장 하나만 찍혀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계속 감시해 왔으며 일주일 전에는 망원경과 우편 검열까지 동원했다.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대학교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대학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동원해 이들을 연행했다.

10·15 사건의 교훈

2·22 사건의 대량 구속에 이어 또다시 36명이 연행된 것은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러나 10·15 사건은 2·22 사건과 달랐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92년 2월 22일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꼭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비였다. 10·15 사건 구속자들은 보안경찰의 집요하고 야비한 공격에 맞서 훌륭히 목비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경찰이

새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 때문에 검찰은 보안 경찰이 집회에서 찍은 신문을 판매하고 있는 사진과 피의자들이 갖고 있던 반정부 사회과학 서적 따위의 궁색한 '증거'만을 들이밀며 '이적 표현물 소지·배포죄'로 기소했다.

10·15 사건 구속자들은 목비를 통해 조직을 훌륭히 보호했고 이것은 2·22 사건과 비교해 엄청난 발전이었다.

프락치 임운선

그러나 92년 2월 22일 습격과 마찬가지로 보안 경찰은 국제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첩자를 침투시켜 조직의 핵심을 파괴하려 했다.

보안경찰의 프락치인 임운선은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 영남위원회'로 보도된 사회주의자들을 경찰의 손에 넘겨 고초를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한 자다.

그는 93년 7월에 영남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부산의 한 집회에서 만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영남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분신 경력이 있는 그를 의심해 보지 못했다. 그는 전신 화상 흉터가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현대중공업 노조 전위원장 이원건 씨가 수배생활을 할 무렵, 경찰이 이원건 위원장을 잡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부산 지역 활동가들 사이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또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만나기 전에 부산의 한 재야 단체에 회원으로 등록해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활동가들의 돈을 훔치고 결국 금고까지 털어 간 파렴치한 자이다.

국제사회주의자 그룹에 가입한 이후에도 한 지지자의 돈을 훔쳤으나 스스로 극구 부인해서 유야무야된 적이 있었다. 영남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은 그 때부터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으나,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결국 그는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영남 국제사회

주의자들의 신상과 거주지 등을 남김없이 경찰에 제공했다.

그는 서울에서 있었던 토론회에서 사람들이 한 모든 얘기를 녹음해서 경찰에 넘겼고 심지어 영남 구속자들이 검찰에서 심문받을 때 공판 전 증인으로 출석해 형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하의 탄압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을 비롯한 옛 여권을 혐오하고 변화를 갈망했던 대중의 바람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은 한때 군사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자신의 전력을 내세우며 변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그도 역대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권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억압 장치들을 휘두르고 있다.

김대중은 메이 데이 시위 때 행진을 막으며 최루탄을 쏘고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봉쇄했으며 경찰의 진압에 항의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마구 연행했다. 시위 때 찍어 놓은 사진 채증으로 1백8명을 수배하고 시위 노동자들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돼 전국을 이 잡듯 뒤졌다.

또,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한 것을 철회하기는커녕 더 많은 한총련 간부들을 잡아갔다.

좌파에 대한 조직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1998년 5월 7일 공포탄 발사까지 해가며 국제사회주의자 17명을 강제 연행했고 그 뒤 북부노동자회(5/13), 인제대 자주대오(5/29), 안양민주화운동 청년연합(6/3), 전국학생연대(6/9), '영남위원회'(7/22)등 1주일이 멀다 하고 좌파 단체들을 구속했다.

북부노동자회는 97년 5월에 정식으로 해산한 뒤, 김영삼 정권 때 구속된 회원에 대한 후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를 "조직 재건 기도"라며 남은 회원들을 모조리 구속했다.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그 동안 안양시로부

터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온 지역 주민 봉사 단체인데도 "이적 단체"로 규정됐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서 보안경찰은 무려 3년간에 걸친 도청에 바탕해 이들을 터무니없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결성으로 구속했다.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최하 3년에서 15년까지 전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것은 김대중이 집권하자마자 "절대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김대중은 집권 이후 10월 21일까지 모두 5백81명을 구속시켰다.

이 가운데 3백1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 이것은 과거 김영삼 정권이 같은 기간동안 1백8명을 구속했던 것에 비해 무려 세 배 가까이 되는 숫자다.

김대중은 "가장 신중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98년 광복절 사면·복권에서 전두환·노태우 같은 쿠데타 세력과 부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면서도 대다수 양심수들을 제외시켰다.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사면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사상전향제도를 모든 양심수에게 해당되도록 바꾼 준법서약제를 요구해 서약서를 쓴 94명만을 석방하고 나머지 360명을 그대로 가둬 놓았다.

5·7 사건

1998년 5월 7일 김대중의 안기부와 경찰은 IS 조직원 17명을 연행해 갔다.

안기부 직할 보안경찰인 남영동 보안수사대는 5월 7일 오후 10시 전경 50명을 앞세우고 공포탄과 최루탄을 쏘면서 청량리 위생병원 인근의 하이트광장 생맥주 호프를 습격했다.

경찰은 박효근 씨(실업자)와 한규한 씨(서울시립대 국사학과)와 이지영 씨(한양대 사학과) 등 사회주의자 11명에게 총을 겨누며 폭행을 가하고 연행해 갔다.

경찰은 11명을 연행한 직후 서울시립대 학생회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최루탄을 쏘고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을 폭행하고 일차러를 강요했다.

같은 시각에 경찰은 전경 2개 중대를 한양대에 투입해 음대 건물을 수색했다. 앞서 언급한 연행된 사회주의자들이 숨긴 문건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한편, 경찰은 인하대 안에서 토론하고 있던 또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연행하기 위해 학교 안에 들어갔으나 때마침 학내 문제로 농성중이던 인하대 학생 수십 명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러나 일부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집에 돌아가다가 결국 연행됐다.

연행된 사회주의자들은 대공분실에서 경찰들에 맞서 목비를 완벽하게 했다. 그 결과 경찰은 프락치 박장미의 진술과 도청 내용 이외의 증거는 거의 확보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주의자 구속자들은 재판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사악하고 위선적인 김대중 정권을 폭로하고 혁명적 주장을 거리낌 없이 펼쳤다.

국제적 연대

5월 7일 경찰이 국제사회주의자 17명을 구속한 데 대한 미국 사회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의 항의시위가 김대중이 미국에 체류 중이던 1998년 6월 초에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

6월 6일에는 김대중에게 국제인권상이 수여되고 있던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 바깥에서 25명 남짓의 사회주의자들이 팻말 시위를 벌였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상을 수여한 국제인권협회에 수없이 항의 전화를 걸었다. 국제인권협회는 항의 전화에 시달린 나머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 두었을 정도였다.

6월 10일 김대중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던 날에는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보스턴, 시애틀, 오

스틴(텍사스), 매디슨, 아이오와 시티, 피츠버그, 클리블랜드의 주로 한국 영사관과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김대중이 가는 곳마다 항의시위를 벌여 김대중을 찢찢매게 했다.

5월 26일 미국 활동가들은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김대중의 특별 강연장에 몰려가, 국제사회주의자들과 여타 한국인 투자들에 대한 김대중의 투옥 조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1천5백여 청중들에게 항의 리플릿을 나눠주었다.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김대중은 미국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칭송을 늘어놓았다.

왜 사회주의자들을 투옥하느냐는 한 항의자의 질문에 김대중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다 해서 수감된 사람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말을 했다 해서 수감된 사람은 단지 20명뿐"이라고 당혹스럽게 시인했다.

그 20명에 대해서 그러나 김대중은 이렇게 덧붙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바꿀 기미를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머리 속에 있는 사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적어도 말과 행동에서 그들은 더 이상 정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어느 국가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수감할 것이다."

영국 사회주의자들도 김대중에게 항의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주영 한국대사관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노동당 정부의 좌파 의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로부터 국제사회주의자 석방서명을 받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서명자 가운데는 영국 노동당 의원인 토니 벤과 제레미 코빈도 포함돼 있다.

프락치 이은규

92년과 94년 두 차례의 대습격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지난해 5월 대습격에서도 프락치들을 이용한 도청과 비디오 촬영으로 국제사회주의자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5월 습격에서 타격을 받은 국제사회주의자 지부는 동서울 지부와 서서울 지부였는데 두 군데 모두 경찰 첩자의 침투가 있었다.

서서울 지부에 침투한 경찰 첩자 이은규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침투한 경찰 밀정 노릇을 하기 전부터 영창악기 노동조합 안에서 회사 및 지역 경찰의 정보망 노릇을 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경찰 습격 이후에야 한 노동조합 활동가를 통해 이은규의 과거 전력을 알게 됐다.

이은규가 영창악기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지 투쟁을 벌였던 1992년 회사는 지역 깡패들을 구사대로 동원해 노동자들의 복지 투쟁을 공격했다. 이은규는 당시 구사대로 '활약'했으며, 그 뒤 영창악기 사측은 그 답례로 그를 입사시켰다.

이은규는 영창악기 사측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인천 서부경찰서가 영창악기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심어놓은 밀정이었다.

이은규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동태를 보고하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조합 내에 있는 정치조직원들의 색출 작업에도 관여했다.

김새를 눈치챈 활동가들의 배척으로 회사 안에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던 이은규는 1996년 11월 노동자 대회 즈음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접근했다.

당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투쟁의 고양에 힘입어 소수 노동자들과 연관을 맺을 수 있었다.

이은규는 이러한 물결을 타고 슬며시 국제사회주의자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들어오자마자 자신이 파악한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내부 정보를 보안 경찰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은규는 모임에 꼬박꼬박 참여하면서 토론된 내용과 인적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보안 경찰에게 제공했다. 5월 7일 경찰 습격으로 체포된 동지들에 관한 수사 내용을 보면, 서서울 지부의 집회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사진까지 찍혀 있다.

그는 1997년 5월경에 승용차를 구입해 국제사회주의자 지부 모임이 늦게 끝나 대중교통 수단이 끊기면 조직원들의 집까지 차를 태워 줌으로써 거주지를 파악했다. 이은규의 승용차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갔던 회원들은 예의 없이 5월 7~8일에 보안경찰의 습격을 받았다.

경찰 습격 뒤에도 이은규는 간신히 연행을 모면한 몇몇 조직원들마저 경찰에 넘겨주기 위해 기회를 모색했다.

그는 5월 17일 지금은 완전히 파괴되고 없는 인천 팀의 모임이 끝난 뒤 자신의 차에 세 사람을 태워 모임 장소를 빠져나갔다. 보안 경찰은 십여 분 후 승용차 네 대로 이 차를 포위했다.

경찰은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연행하면서 이은규가 첩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한총련 수배자 검거라는 핑계를 댔다. "한총련 대의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교활하게도 국제사회주의자들 연행을 우연적 사건으로 가장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과 첩자간의 어설픈 수작은 이은규가 잡히지 않은 순간 허점이 폭로됐다. 어떻게 승용차를 덮쳤는데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경찰의 습격을 피할 수 있었겠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주의자들은 비로소 이은규가 밀정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보안 경찰과 이은규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아직 작업장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다. 이은규는 마치 전투적인 노조 투사인 척했다.

그러나 경찰 첩자 이은규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앞에서 <공산당 선언>같은 책자를 읽는 시늉은 하면서도 작업장과 대중 집회에서 신문을 팔지 않았고, 외부에도 혁명적 선전을 하지 않았다.

프락치 박장미

동서울 지부에 침투한 경찰 첩자 박장미는 1997년 겨울쯤 집회에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을 만나 그

룹에 가입했다. 박장미는 자신이 대우자동차판매 영업소에 다니는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장미는 대우자동차에 다니는 사실은 있지만 그만둔 상태였다.

박장미는 이은규와 마찬가지로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토론 과정을 전부 녹음했다.

구속된 동서울 지지자들은 경찰에서 신문 받을 때 자신이 토론 중에 한 말이 토씨 하나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안이 병병해질 정도였다.

또, 박장미는 전경을 투입해 시립대 학생회관을 압수수색할 때 앞장서서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신문을 보관한 동아리방을 가르쳐 주었다.(이 사실은 압수수색에 항의했던 한 시립대학생이 나중에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제보해 주었다.)

남영동 보안경찰은 동서울 지부원들이 모임을 자주 가졌던 서울시립대와 세종대학교 측에 협조요청을 해 강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임을 빠짐없이 촬영해 둔 다음 경찰 조사에서 증거로 들이대며 신문했다.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한 내용도 대부분 이은규나 박장미가 수집해 둔 정보와 도청 내용, 비디오 촬영한 것들이었다.

사상전향 강요하는 법정구속

여러 가지 여건상 구속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기가 어려웠던 1심 재판부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속자들을 집행유예로 풀어 주었다.

그러나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 박송하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들 가운데 이의철 씨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법정 구속했다.

사실 애초에 집행유예로 풀어 준 것은 '선처'를 베푼 것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전술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일단 풀어 준 다음, 계속 활동할 의사를 버리지 않으면 다시 잡아갈 것이라고 위협해 재판 계류자들

이 동요한 나머지 기가 꺾이도록 하는 것이 이 전술의 목적이다.

법원은 이의철 씨를 법정 구속함으로써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국가 탄압에 도전적으로 저항하고 실행 구속될 것인가 아니면 투항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인가.

용감하게도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검찰과 재판부의 신념 철회 강요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우기로 마음을 굳혔다. 사회주의의 원칙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대학 총학생회와 재야단체를 방문하며 법정구속 위협에 항의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명동성당에서 국가의 신념 철회 강요와 법정구속 위협에 항의하며 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들이 항소심 선고일인 1999년 2월 5일에 법정 구속당한다면 다시 한 번 위선적인 김대중 정권의 사악하고 비민주적인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

연인원 125명의 연행자 명단

정확히 파악된 사람만 수록

92년 2월 22일

한상수(연대 경영학과, 구속) / 권병섭(건대 화공학과, 구속) / 정수경(외대 서반어어 줄, 구속) / 이성복(외대 대학원, 구속) / 김주희(외대 왕산 독일어, 구속) / 이정구(고대 대학원, 구속) / 오민환(동덕여대 아동학과, 구속) / 조현정(동덕여대 국사학과 줄, 구속) / 김주서(동부금속노조 노동자, 구속) / 이금호(노동자) / 최현희(동덕여대 도서관학, 불구속) / 박형주(동덕여대 가정학과 줄, 불구속) / 박정미(경희대 국문학과, 구속) / 김민정(경희대 국문학과, 불구속) / 이혜숙(노동자, 불구속) / 이우봉(성동고등학교 학생, 불구속) / 유상은(노동자, 구속) / 김종배(노동자, 구속) / 조승희(외대 독일어, 구속) / 안옥선(외대 왕산 중국어, 불구속) / 은영숙(고대 노오노문, 구속) / 최진명(고대 국어교육, 불구속) / 류연득(고대 국어교육, 불구속) / 장 선(숙명여대 생물, 구속) / 박효근(국민대 중어중문, 구속) / 장성호(국민대 법학, 불구속) / 김동창(강운대 전자통신, 구속) / 정재호(광운대 전산, 불구속)

92년 3월 4일

김용운(신평론 출판사 직원, 구속) / 부혜진(외대 독일어, 구속) / 박진희(외대 대학원, 구속) / 신순례(숙명여대 생물 줄, 구속) / 이남순(배화여전 학보사, 불구속) / 이남수(외대 불어, 구속)

92년 7월 29일

정동석(현대차 해고노동자, 구속) / 박매령(주부, 구속) / 송낙재(한남대 법학, 구속) / 김동철(외대, 구속) / 한은희(동아대 역사학, 불구속) / 김은주(동아대 역사학, 불구속) / 광곤수(노동자, 구속) / 이귀행(노동자, 구속)

92년 10월 28일

최일봉(구속)

93년 12월 7일

심경애(노동자, 구속)

94년 5월 7일

이남수(외대 불어 줄, 구속) / 김희정(외대 왕산 줄, 구속)

94년 6월 1일

부혜진(외국어대, 구속)

94년 6월 3일

정동석(현대자동차 노동자, 구속) / 박영희(구속) / 백삼용(노동자, 구속) / 조승희(외대 독일어, 구속)

94년 8월 17일

박정미(경희대 국문과 줄, 구속)

94년 9월 12일

김영민(구속) / 김태현(구속)

94년 10월 15일

최일봉(IS그룹 전 편집자, 구속) / 박순봉(책갈피 출판사 대표, 구속) / 정원현(외대 무역학과, 구속) / 남수경(고대 줄, 구속) / 국경하(동덕여대 줄, 구속) / 한규한(시립대 국사학과, 구속) / 한은솔(시립대 국사학과, 구속) / 이혜숙(노동자, 구속) / 이택규(외대 중국어과, 구속) / 안우춘(단국대 사학과, 구속) / 김성학(시립대 도시행정학과)

94년 10월 15일

서수진(국제신문 노조 여성부장, 구속) / 정은경(대우정밀 대의원, 구속) / 정도근(봉생병원 쟁의부장, 구속) / 임철진((주)일산 해고 노동자, 구속) / 최은광(운수노동자, 구속) / 김동철(외국어대 무역학과, 구속) / 한은희(동아대 졸업, 구속) / 박정주

(학원장사, 구속) / 박정수(경남전문대 전자공학, 구속) / 이해선((주)일산 노동자, 구속) / 송자은(부산교대 국어교육, 구속) / 고희용(운수노동자, 구속)

94년 7월 8일

이길용(학생, 구속)

95년 1월 21일

신용섭(외국어대 아랍어과, 구속)

95년 3월 30일

이영두(외대 영어과, 구속)

95년 5월 9일

박미영(진주경상대 국문과, 구속)

95년 6월 5일

강종숙(시립대 법학과, 구속) / 박매령(주부, 구속) / 이영표(한양대, 구속)

96년 6월 4일

박소연(한성대 줄, 구속)

96년 11월 10일

하영준(한양대 사학과, 구속)

97년 1월 21일

류민희(시립대 행정, 구속) / 김선미(시립대 행정, 구속)

97년 1월 26일	98년 4월 3일
이남영(인하대 대학원, 구속)	김용민(고려대 법학과, 구속)
97년 2월 1일	98년 5월 7일
임미정(시립대 영문학, 구속) / 정진희(학습지 교사, 구속)	이의철(인하대 의대본과, 구속) / 이정원(시립대 환경원예, 구속) / 이지영(한양대 사학과, 구속) / 조영재(외대 서반어, 구속) / 주수영(덕성여대 역사학과 졸, 구속) / 한규한(시립대 국사학과, 구속) / 한은솔(시립대 국사학과, 구속) / 박창한(중앙일보 노동자, 불구속) / 공길숙(경기대 졸, 구속) / 권오현(국민대 졸, 구속) / 김동철(외대 무역학과 졸, 구속) / 김미경(재능교육 강사, 구속) / 유명미(실업 노동자, 구속) / 모승훈(한국항공 조합원, 구속) / 문명주(시립대 행정학과, 구속) / 박종호(실업 노동자, 구속) / 박효근(실업 노동자, 구속) / 류민희(시립대 행정학과, 구속) / 이우봉(실업 노동자, 구속)
97년 2월 3일	
정명아(실업노동자, 구속)	
97년 4월 8일	
김현우(국민대, 구속)	
97년 5월 29일	
유규하(파트타임 노동자, 구속)	
97년 7월 2일	98년 6월 10일
장한빛(한성대, 구속) / 박소연(한양대 사학과, 구속)	윤혜숙(실업노동자, 구속)
97년 8월 27일	98년 9월 30일
이영두(언론단체 상근자, 구속)	박정주(학습지 교사, 구속) / 주삼환(여의도 성모병원 노동자, 구속)
97년 10월 3일	98년 11월 12일
김성학(시립대 도시행정, 구속)	전주현(시립대 조경학과, 구속) / 함진철(서비스직 노동자, 구속)
98년 1월 16일	98년 11월 25일
양정애(진주경상대 국문, 구속)	홍교선(책갈피 출판사 노동자, 출판노조원, 구속)

이의철 씨 법정구속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보도 자료

수신 :
 발신 : 검찰 · 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약칭: IS사건 재판 계류자들)
 내용 : 이의철 씨 법정구속과 김대중 정부 하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관련 보도 자료
 날짜 : 1999년 1월 25일
 발신인 연락처 : PCS:018-235-2891 / 나우누리 ID : 대책위 / E-MAIL:mkkim@nownuri.net
 인터넷 홈 페이지: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Congress/6923>

1. 안녕하십니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귀 신문사 · 단체에 존경의 뜻을 밝힙니다.

98년 3월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법으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는 수많은 정치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한에서 정치수를 후원하는 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98년 12월 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정치수가 약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했고, 또 세계 인권선언에도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집권 이후 무려 311명의 정치수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킴으로써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약속과 책임을 그 자신 스스로가 보란 듯이 어기고 있습니다.

2. 김대중 정부 하 국제사회주의자(IS)들 탄압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가 집권한 이래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은 가장 대표적인 정치 단체가 '국제사회주의자들(International Socialists Of South Korea)' 입니다.

92년 2월 22일 군사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이래 국제사회주의자들(IS)은 모두 140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역시 집권 두 달 만인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 대한 탄압을 했습니다.

남한 경찰은 5월 7일 11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제대로 된 체포영장도 없이 권총을 머리에 들이밀며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여성 활동가들조차도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이처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이유는 단지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선전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남한 정부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일상적으로 탄압 받고 있는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과는 달리 전세계 20여 개 국가의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조직들은 그 나라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활동이 정당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남한 정부만이 국제사회주의자들(IS)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가보안법으로 연행·구속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총 : 27명)

▷ 3월 16일 양정애(진주경상대 국문학과 90)

▷ 4월 2일 : 김용민(22. 고려대학교 학생)

▷ 5월 7일 : 박효근(31. 국민대학교 중문과 제적) / 박종호(33. 한신대 정치경제대학원 중퇴) / 문명주(26.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제적) / 류민희(23.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3년) / 한규한(26.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4년) / 한은솔(24. 서울시립대 사학과 제적) / 주수영(27. 덕성여자대학 사학과 졸업) / 이우봉(24. 실업노동자) / 이정원(23.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4년) / 이지영(22. 한양대 사학과 3년) / 김미경(27. 단국대학교 졸업)

▷ 5월 7일 : 김동철(28. 한국외국어대학 졸) / 유명미(31. 덕성여대 졸) / 모승훈(26. 한국항공 노동자) / 권오현(27. 국민대학교 졸) / 조영재(26. 한국외국어대학교 중퇴) / 이의철(22. 인하대학교 학생) / 공길숙(27. 경기대학교 졸) / 박창한(27. 경기대학교 졸)

▷ 6월 1일 : 윤혜숙(27. 실업노동자)

▷ 9월 30일 : 박정주(27. 학습지 교사) / 주삼환(35. 여의도 성모병원 노동자)

▷ 11월 12일 : 전주현(21.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 함진철(25. 서비스직 노동자)

▷ 11월 25일 : 홍교선(26. 출판노조, 책갈피 출판사 노동자)

이 가운데 박효근(징역 2년), 박종호(징역 1년 6월), 문명주(징역 1년 6월), 류민희(징역 1년 6월), 김동철(징역 1년), 이의철(징역 1년 6월), 홍교선(재판 중) 씨 등 모두 7명이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3. 이의철 씨 법정구속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 재판정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5월 7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22. 인하대 의대 본과 1년)를 법정구속(재구속)시킨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의철 씨의 1심 최후진술문을 인용하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는가,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등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이의철 씨는 여전히 1심 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이의철 씨를 재구속 시킨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이의철 씨가 재판정에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억울한 데, 석방된 지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아 "사상과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 돼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그리고 검찰·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정치수들에게 법정구속을 빌미로 신념을 철회시키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저버릴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불구속 재판 계류중인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항소 재판과 관련하여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여러명의 정치수들에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항소의 이유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 시킨 이유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당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정치수가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한규한, 한은솔, 이우봉, 김미경, 이정원, 주수영, 이지영, 윤혜숙, 박정주, 주삼환, 모승훈, 김용민 등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하지 않을 경우 재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규한, 한은솔, 이우봉, 김미경, 이정원, 주수영, 이지영 등 6명은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시킨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에 항소심이 배당돼 법정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5. 대책위 활동과 명동성당 농성에 관련하여

이들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정치수들은 김대중 정부의 부당한 인권탄압에 맞서고자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약칭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이의철 씨 법정구속의 부당함과 재구속을 위협으로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8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 석방 캠페인과 4백여 명에 달하는 양심적인 정치수들의 석방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시민적·반인권적인 법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판계류자들은 이의철 씨의 법정구속을 보면서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표현하고 지키는 것조차 이나라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의철 씨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을 고수한다면 다시 차가운 감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람에게 몇 달 사이에 자신의 신념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검찰,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로 다시 구속을 시키는 것은 정말이지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방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막다른 절벽으로 한 개인을 몰아가는 사상재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4명의 재판계류자들 중 8명(한규한, 이정원, 이우봉, 한은술, 김미경, 이지영, 주수영, 윤혜숙)은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판계증자들 중 7 명(한규한, 이정원, 이우봉, 한은술, 김미경, 주수영, 이지영)은 2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한 개인의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철회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한복판에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고 전까지 농성 투쟁을 계속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6.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토론회와 관련하여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로 5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개악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사회 구석구석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자기 머리 속에서 1차적인 '검열'을 하도록 강요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사상과 생각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정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을 할 정도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전혀 진지한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철폐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국가보안법이 무엇이 문제이고, 왜 철폐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철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동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를 기존의 토론회처럼 논의의 자리로만 제한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진정한 철폐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실천의 모색이 더욱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보안법 철폐에 관심이 있고 나아가 그 과정에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꼭 참석하여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회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주 제 : 김대중 정부와 국가보안법(기조발제 ;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삼석)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위한 주장들(IS 사건 재판 계류자,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경희대 총학생회에서 패널 토론자 1인 씩)

일 시 : 1999. 2. 3. 수요일. 오후 5시-8시

장 소 : 향린교회(명동성당에서 1분 거리)

주 관 : IS사건 재판계류자들

주 최 : IS사건 재판계류자들, 국민승리21, 민권공대위, 청년진보당

후 원 : 한노정연, 정치연대, 사회진보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중앙대 총학생회, 국민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인하대 총학생회 비대위, 서울시립대 공대학생회, 서울시립대 언론협의회, 연세대 이과대학생회

7. 국제사회주의자들의 항소 결심재판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정(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에서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항소 결심재판이 있었습니다.

1차 심리는 지난 12월 16일 같은 재판정에서 열렸으나, 검찰측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어 연기되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효근(31. 국민대학교 중문과 제적) / 박종호(33. 한신대 정치경제대학원 중퇴) / 문명주(26.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제적) / 류민회(23.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3년)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 나온 한규한(26.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4년) / 한은술(24. 서울시립대 사학과 제적) / 주수영(27. 덕성여자대학 사학과 졸업) / 이우봉(24. 실업노동자) / 이정원(23.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4년) / 이지영(22. 한양대 사학과 3년) / 김미경(27. 단국대학교 졸업)등 11명이 검찰측의 항소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사측은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심증, '범죄사실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 1심에서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 중 무죄로 인정된 부분의 유죄 인정, '피고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11명 전원을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항소 사유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피고인들에 대한 일체의 심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장에 적힌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았으며, 재판부 나름의 '법적 판단'을 위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유일한 자기방어 수단인 최후진술조차 충분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강경한 항의에 부딪혀서야 마지못해 제한적인 최후진술을 허용했습니다.

우리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이 분명한 사상재판이며,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법 형사 2부 재판부가 지난 11월 6일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의철 씨를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시킨 것에 대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재판 계류자들의 항의에 박송하 부장판사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신념 철회를 강요한다는 겁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시킨 고법 형사 2부 재판부와 검찰 아닙니까?"라고 되물어야 했습니다. 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개인의 행위가 아닌 사상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사실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얼마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국제유엔인권위원회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얘기한 것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공판은 표면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념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검찰은 항소를 스스로 취해야 마땅하며, 재판부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의 공색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사상재판인가 아닌가는, 검찰 법원이 신념 철회를 강요하는가 아닌가는 2월 5일 선고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11명의 IS 사건 선고 공판은 2월 5일 오전 10시 고등법원 형사 2부 302호 재판정에서 있습니다.

귀 언론사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개인의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저희와 같은 좌파정치조직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의 완전한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저희와 같은 좌파에 대한 탄압에 대해 눈감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의 연락처나 농성장으로 찾아오시면 더 자세한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 신문사·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대회의의 성명서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의 법정구속(재구속)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는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의철(인하대 의대 본과 1년)씨를 법정구속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상탄압과 인권탄압은 그 동안 그 부당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심지어 유엔인권이사회조차 국가보안법 제7조가 일반적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문제제기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석방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이의철 씨를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비인간적 행위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방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막다른 절벽으로 한 개인을 몰아가는 사상재판에 반대한다. 신념과 양심으로 지킨다고 해서 재구속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탄압이다.

그리고 50년 동안 숭한 인권탄압과 사상탄압을 자행해 온 국가보안법에 우리는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권 대통령"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영남위원회 사건·안양민청련 사건 등의 조직사건과 한총련·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그의 선언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무기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더군다나 법정구속 위협으로 개인의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상재판을 중단할 것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연대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 인권운동사랑방 / 국민승리21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참여연대 국제
인권센터 / 구속노동자후원회 /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청년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자들 /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책에 반대한다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며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이제 '인권 탄압 대통령'임이 분명해졌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출범 이후 10월 말까지 311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하루에 1.24명 꼴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구속한 셈이다.

또, 정치 수배자도 182명에 달하고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에 묶여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차디 찬 감옥 안에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저항했던 43명의 노동자들이 갇혀 있다.

그리고 98년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민애청, 민청노회, 안양민청련, 진보민청 등의 조직에 대한 탄압은 김대중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과 하나도 다를바 없음을 보여줬다.

김대중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이것뿐만 아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 재판부는 한 개인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이미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21. 인하대 의대 1학년)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시킨 것이다.

한편에서는 세계 인권선언 50주 년 행사가 떠들썩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대가로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 때문에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억울한 데, 석방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상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런 행위는 교조적 편견에 찌들은 중세의 종교 재판관들이 갈릴레이에게 "지구가 돈다는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하나도 다를바 없다.

김대중 정부는 재판정에서 사상과 양심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법정구속을 당할 것인가하는 비열한 사상재판을 이의철 씨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12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이우봉, 한규환, 한은술, 김미경, 이정원, 주수영, 이지영, 윤혜숙, 박정주, 주삼환, 모승훈, 김용민 씨—에게도 강요하고 있다.

김대중은 기만적인 준법서약제를 만들 때조차도 "사상을 전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금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1심에서 풀려난 12명의 양심수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버리라고 협박하는 김대중 정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다.

우리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출소자 대책위는 '자신의 사상과 양심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방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막다른 절벽으로 한 개인을 몰아가는 사상재판에 반대한다.

12명의 사회주의자들을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지키고 해서 법정구속(재구속)을 시키는 행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명한 인권탄압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받고 있는 12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에게 법정구속이라는 폭력 앞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법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대의를 방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가열차게 요구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와 모든 양심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세력들의 연대와 투쟁이 필요하다.

96년 연대 사태 이후 자행된 정부의 한총련 마녀사냥은 이제 한총련을 넘어 거의 모든 노동운동세력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진정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민중운동 전반이라는 것임을 명확히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재판에 대한 반대를 요구하는 투쟁은 노동자·민중 운동 전반에 중요하게 제기돼야 할 과제이다.

★우리의 요구

- 하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하나.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를 즉각 석방하고 비열한 사상재판을 중단하라!
- 하나. 감옥 안에 있는 9명의 국제사회주의자 박효근, 문명주, 박종호, 류민희, 김동철, 이의철, 전주현, 함진철, 홍교선 씨를 즉각 석방하라!
- 하나. 구속된 민애청, 민청노회, 안양민청련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 하나. 감옥 안에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전원 석방하라!
- 하나.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폐하라!

**이의철 씨 법정구속 규탄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출소자 대책위**

김대중은 법정구속(재구속)으로 사상전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재판정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떠들썩하게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애기되고 있는 지금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대가로 법정구속(재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 때문에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것도 참을 수 없이 분노스러운데, 석방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상을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김대중은 기만적인 준법서약제를 만들 때도 "사상을 전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1심에서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버리라고 협박하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의 인권성적표는 취임 이래 구속된 311명의 양심수와 182명의 정치수배자 그 보잘 것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철 씨를 비롯한 10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출소자들은 검찰이 항소를 해 다시 한 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에게 법정구속이라는 폭력 앞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가열차게 요구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의철 씨 석방 그리고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재판소식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일지
박효근, 박종호, 문명주, 류민희, 주수영, 김미경, 한규한, 한은술, 이우봉, 이정원, 이지영 2심 심리 • 장소: 서초동 서울 고법 302호 • 시간: 1월 20일 (수) 오후 2시	• 5월 7일 : 박효근(31. 무직) 외 10명 연행·구속 • 5월 7일 : 이의철(22. 인하대 의대) 외 7명 연행·구속 • 6월 10일 : 윤혜숙(27. 노동자) 연행·구속 • 9월 30일 : 박정주(27. 학습지 교사) 주삼환(35. 여의도 성모병원 노동자) 연행·구속 • 11월 19일 : 전주연(21. 서울시립대)·함진철(25. 노동자) 연행·구속

이의철 씨 법정구속 규탄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출소자 대책위

사상의 자유

러시아 황제는 코사크 신하에게 명하여
 전국민의 수염을 깎게 했다고 하는데, 그
 러한 명령조차 수염을 기르고자 하는 나
 의 생각을 연도기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
 놓으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 K. Marx.

★ 제1호 / 발행일: 1998년 12월 29일 / PCS: 018-235-2891 / BP: 012-1895-3327 / 나무누리 ID: 대책위 ★ 국가보안법 철폐! / 양심수 석방! / 사상재판 반대!

검찰·법원은 신념 철회를 강요하지 마라!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는 이의철 씨(인하대 의대)를 법정구속했다.

이의철 씨는 지난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이 나라 재판부는 풀려난 지 겨우 세 달도 되지 않은 그를 "여전히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시킨 것이다.

개인의 신념을 재판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날날이 발가 벗기는 일은 정말 목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술 더 떠 그 자리에서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위협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행위는 중세의 편견에 찌든 종교재판관들이 갈릴레이에게 '지구가 돈다는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한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의철 씨의 항소재판 심리과정을 살펴보자.

- 재판장 : 피고인은 1심 최후진술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이의철 : 그렇다.
- 재판장 : 어허!!! 피고는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잘 모르나 보지...?

이것이 바로 소위 '증거 재판주의'를 추구한다는 이 나라 재판과정의 본질이다.

갈릴레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념을 법정에서 포기하고 반성문을 썼다면 이의철 씨는 차가운 감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의철 씨는 정부의 사법적 판결들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상재판에 지나지 않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

을 지키는 대가로 차가운 감방을 선택했던 것이다. 게다가 IS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 재판에서 풀려난 12명의 사람들도 이런 선택에 직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감방을 선택할 것인지라는 막다른 절벽으로 한 개인을 몰아가는 사상재판에 반대한다.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고 해서 재구속을 시키는 일은 분명한 인권탄압이다.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보다 10일 빠름을 뻔뻔스럽게 빠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키는 일에는 모든 민주 세력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96년 연대 사건 이후 자행된 정부의 한총련 마녀사냥은 이제 한총련을 넘어 거의 모든 노동운동 세력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IS에 대한 탄압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운동은 한총련과 IS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한총련과 IS에 대한 탄압은 바로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을 겨냥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분열 지배전략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감옥 안에 있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서울구치소 주소 : 우. 435-050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
 이름 : 000(수번)

이름	수번	이름	수번
박효근	18	이의철	62
김동철	14	전주현	5030
문명주	17	류민희	5008
박종호	86	홍교선	50
함진철	68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가 보낸 편지

재판계류 중인 동지들에게

"구속을 택함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니다.

·인권하루소식·에 저의 법정구속 소식이 실렸더니 정말 기쁘군요. 저의 법정구속은 제가 받은 재판이 말 그대로 '사상재판'이 있음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저의 일을 자신들의 소식지에 실어 김대중 정권의 본모습—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을 폭로하는 데 근거로 사용한 인권운동사랑방에 깊은 감사로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있더군요.

5월 7일 여행했던 11명의 동지들이 저를 구속시킨 재판부에 배정되었다니 그들도 저와 같이 재구속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

재판정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해 놓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고 1년 6월의 실형을 택한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던 1년 6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년 6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날을 날카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당히 구속당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김대중의 온갖 미사여구가 단지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11명의 동지들에게 작년 서준식씨가 한총련 대의원들에게 한 말인 '구속을 택함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몸이 구속당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잠시일 뿐이고 세계혁명운동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지요.

이 남한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당연히 신체의 구속이 가해지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이 글이 IS 대책위 동지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구속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끝장나지 않는 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디 이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1998년 12월 12일

독방으로 전방 온 날 입김을 불어가며 먼저 구속을 택한 의철 씨

재판소식
박효근, 박종호, 문명주, 류민희, 주수영, 김미경, 한규한, 한은술, 이우봉, 이정원, 이지영 2심 심리 · 시간 : 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초동 서울 고법 302호
이렇게 해주십시오
· 이의철 씨 법정구속에 항의하는 서명과 성명서 발표에 동참해 주십시오.(가능하면 나무누리 찬우물 속보란에 성명을 띄워 주십시오.) · 법정구속과 사상재판의 부당성을 여러분의 단위에서 최대한 공론화 시켜주십시오.(기관지, 대자보 등을 이용해서)

IS 재판계류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 지난 26일 민권공대위 주최의 '송년 한마당' 행사에서 모금에 동참해 주신 한총련 학생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장 안에서의 모금이 불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5만 8천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모금된 돈은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를 비롯해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쓰여질 것입니다.
★ 경희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공대 학생회, 시립대 신문사, 시립대 교지편집실에서는 이의철 씨 법정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 서울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성균관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건국대 공대 학생회에서도 항의 성명을 발표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님께서 이의철 씨 법정구속에 항의하는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 이 외에 도움을 주신 민권공대위,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의철 씨 법정구속 규탄과 반인권적인 사상재판에 항의하는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계류 사회주의자들

사상의 자유

러시아 황제는 코사크 신하에게 명하여 전국민의 수염을 깎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명령조차 수염을 기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면도기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 놓으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 K. Marx.

★ 제2호 / 발행일 : 1999년 1월 15일 / PCS : 018 - 235 - 2891 / BP : 012 - 1895 - 3327 / 나무누리 ID : 대책위 ★ 국가보안법 철폐! / 양심수 석방! / 사상재판 반대!
★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주소 :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Congress/6923> E-MAIL : mkkim@nowuri.net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맞선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을

명동성당 농성장에 방문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1월 13일,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이하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옛 IS 출신자 대책위)'이 명동성당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다가오는 1월 20일은 작년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한규한, 이정원, 이우봉, 한은술, 김미경, 주수영, 이지영—의 항소심 심리가 열리는 날입니다.

만약 이 재판에서 우리들이 자신의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고 재판에서는 법정구속(재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억압적인 재판정에서도 곳곳게 신념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자 명동성당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검찰과 법원이 한 개인의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철회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울 한복판에서 널리 알리고자 명동성당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고 전까지 농성 투쟁을 계속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과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재판 계류 중인 사회주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과 신념을 처벌하는 법, 즉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철폐시키는 투쟁과 서로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미군반대와 전쟁반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총련 농성단과 함께 연대해 투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시민·민주적 권리인 사상·신념의 자유조차 김대중 정부에서는 투쟁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철회를 강요하는 검찰과 법원에 맞서 더욱 힘있게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연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길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법정구속(재구속)까지 각오하며 싸우는 사회주의자들과 만나 보십시오.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신념을 탄압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해 어떠한 주장과 행동이 필요한 지 함께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연대는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작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p>지지 방문과 함께 농성 투쟁 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p> <p>★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법정구속(재구속)까지 각오하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신다면 지금 당장 농성장을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성 투쟁 기금을 아래의 계좌번호로 후원해 주십시오.</p> <p>※ 한빛은행 126-08-104627 이우봉</p>
--

지지 성명서를 발표해주신 동지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

"재판정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PC 통신과 대자보를 통해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주신 동지들께 동지적 신뢰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서울시립대 공대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PC 통신과 대자보를 통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성명서를 《연장에서 미래를》에 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민권공대위는 신문 '양심수 없는 나라'에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소식을 실어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 그리스 그리고 미국의 좌파 지식인 및 활동가들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재판 계류자들의 재구속에 반대하는 성명서와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이러한 지지와 의미 있는 연대는 우리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동지들의 의미 있는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아마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명동성당 농성이라는 한층 더 수위 높은 투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연대투쟁은 신념철회를 강요하는 검찰과 법원에 맞선 싸움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첫 출발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역시 재판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1999년 1월 15일

동지적 신뢰를 보내며,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립니다

★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검찰과 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맞선 투쟁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 일시 : 1999년 2월 2일(화) 늦은 5시
- 장소 : 향린교회(명동성당 앞)
- 토론 주제 : 기초발제 — 김대중 정부와 국가보안법
패널발제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방향 모색
- 주최 :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옛 IS 출소자 대책위),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민권공대위
- 후원 : 정치연대, 한노정연, 경희대 총학생회, 시립대 공대학생회 (※ 후원단체는 계속 모집 중입니다)
- 참가비 : 2천 원(자료집 포함)

재판 소식

박효근, 박종호, 문명주, 류민희, 주수영, 김미경, 한규한, 한은술, 이우봉, 이정원, 이지영 2심 심리
• 시간 : 1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초동 서울 고법 302호

지지를 바랍니다

- 검찰과 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항의하는 서명을 해 주십시오.
-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농성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가능하면 나무누리 찬우물 속보란에 성명을 띄워 주십시오.)
- 1월 20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재판에 참석해 주십시오.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 ★ 12월 31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일집회 때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투쟁을 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언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가협 어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 1월 12일 《양심수 없는 나라》 출판기념회에서 이갑용 민주노동당 위원장님과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님, 강희남 범민련 의장님, 오세철, 정치연대 대표님, 김귀식 전교조 위원장님 등 모두 48명의 참가자들이 신념철회를 강요하는 검찰과 법원에 항의하는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총 2만2백 원의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된 돈은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농성 투쟁 기금에 쓰여질 것입니다. 서명과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명과 모금을 적극 도와주신 민권공대위 관계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 1월 8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활동가들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투쟁하시는 조계사 농성단 분들께 동지적 신뢰를 보냅니다.
- ★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이 머물 명동성당 농성 장소와 천막을 마련해주신 민권공대위와 전국건설일용노동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천막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신 '새날을여는 실업자연맹' 관계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 ★ 2월 2일 오후 5시에 열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신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민권공대위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를 후원해 주시기로 한 한노정연, 정치연대, 경희대 총학생회, 시립대 공대학생회에 감사드립니다.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사상의 자유

러시아 황제는 코사크 신하에게 명하여 전국민의 수업을 꺾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명령조차 수업을 기르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면도기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 놓으려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 K. Marx.

★ 제3호 / 발행일 : 1999년 1월 25일 / PCS : 018 - 235 - 2891 / BP : 012 - 1895 - 3327 / 나무누리 ID : 대책위 ★ 국가보안법 철폐! / 양심수 석방! / 사상재판 반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eocities.com/CapitolHill/Congress/6923 ★ E-MAIL 주소 : mkkim@nownuri.net ★ 계좌번호 : 한빛은행 126-08-104627 이우봉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재판정에서도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0일, 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정(부장판사 박종하, 배석판사 문강배, 이병로)에서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항소 결심이 있었습

니다. 이 재판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효근, 박종호, 문명주, 류민희 씨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온 한규한, 한은술, 주수영, 이우봉, 이정원, 이지영, 김미경 씨 등 11명이 검찰 측의 항소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재범의 우려가 농후하다'는 심증, '범죄 사실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 1심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무죄로 인정된 부분의 유죄 입증', '피고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11명 전원을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와는 달리 사건에 대한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장에 적힌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문제삼지 않았으며, 재판부 나름의 '법적 판단'을 위한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지난 이의철 씨 재판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고등법원 형사 2부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의철 씨 항소심 재판에서 이의철 씨의 1심 최후진술문을 인용하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당신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 없는가, "이후에도 국제사회주의자들(IS) 활동을 할 것인가"하는 질문들을 피부어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의철 씨는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자신의 신념을 밝힌 이유로 재구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과 신념을 당당하게 밝히려 하는 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박효근 씨는 최후진술을 가로막는 재판부에게 "나는 나의 사상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았고, 2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내야 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을 방어하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와 권리가 있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잠시 간의 휴정 뒤, 겨우 5분이라는 제한적인 최후진술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잠시 간의 휴정 뒤, 겨우 5분이라는 제한적인 최후진술을 허용했습니다.

명백한 사상재판

우리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은 분명한 사상 재판이며,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고법 형사 2부 재판부가 지난 11월 6일 똑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이의철 씨를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시킨 것에 대해 이의철 씨처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항의를 했습니다.

공판 내내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던 박종하 부장판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당신들에게 신념 철회를 강요한다는 겁니까?"하는 황당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의철 씨를 법정구속시킨 고법 형사 2부 재판부와 검찰 아닙니까?"하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들에게 신념철회를 강요한 적 없다"는 재판부의 궁색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사상재판인가 아닌가는, 검찰·법원이 신념 철회를 강요하는가 아닌가는 2월 5일 선고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심 공판을 마치고 2월 5일 선고 공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법정구속을 각오하며 싸워 왔고 7명 전원이 다시 재구속된다 할 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분명합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맞선 싸움에서 완전한 우리의 승리는 구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을 당당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이 지금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사상을 방어하고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지들의 실질적인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계류사회주의자들이 “명동 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검찰과 법원이 한 개인의 신념을 재판장에서 공공연히 철회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맞선 투쟁의 한 방법으로 명동성당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월 13일 농성을 시작해 1월 25일 현재 1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고 전까지 농성 투쟁을 계속하며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감과 결의를 다져갈 것입니다.

정말이지 검찰·법원이 노동자 민중의 평등한 삶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신념 철회를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인 인권탄압입니다.

철회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신념이 아니라 노동약법과 반민주 약법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압력은 단지 국제사회주의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곳 명동성당에서는 반미·반권,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는 한총련 농성단이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중조직인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인권정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2월 5일 선고 재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있게 신념 철회 강요에 맞선 싸움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의미있는 연대가 실질하게 필요합니다.

명동성당 농성장에 오셔서 투쟁을 벌이는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을 토론해 봅시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토론회가 열립니다

- 일시 : 1999년 2월 3일(화) 늦은 5시
- 장소 : 향린교회(명동성당 앞)
- 토론 주제 : 기초발제 — 김대중 정부와 국가보안법
패널발제 —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방향 모색
- 주최 :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국민승리21, 청년진보당, 인권공대위
- 후원 : 한노정연, 정치연대, 사회진보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연세대 이과대학생회, 국민대 총학생회, 중앙대 총학생회, 시립대 공대학생회, 시립대 언론협의회
- 참가비 : 2천 원(자료집 포함)

- ★ 토론회 날짜가 2월 2일에서 2월 3일(수)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토론회가 끝난 후 명동 성당에서 사상재판 반대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그리고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를 위한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 회 가 있 습 니 다

★ 이의철 씨 법정구속 규탄과 정치사상의 완전한 보장 그리고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의 재구속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월 3일(수) 오후 8시
- 장소 : 명동성당
- 주최 :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 가족 대책위

재 판 소 식

박효근, 박종호, 문명주, 류민희, 주수영, 김미경, 한규한, 한은솔, 이유봉, 이정원, 이지영 선고
• 시간 : 2월 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초동 서울 고법 302호
★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의 마지막 재판입니다. 관심을 바랍니다.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

★ 1월 22일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빙딜 반대를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이때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상재판 반대를 위한 모금을 했습니다. 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총 46,150원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전국대, 새총대, 경기대 학생들이 총 19,500원을 IS 사건 재판계류자들의 농성 지지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서울 시립대학교 언론협의회에서도 13,780원을 농성 지지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 오세권 정치연대 대표님께서 IS 재판 계류자들의 명동성당 농성장을 방문해 2만 원을 투쟁기금으로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관관 대학교 학생 두 명도 농성장을 방문해 의미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또, 지지금으로 2만 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 1월 20일 결심 재판에 와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의 깊은 관심 덕분에 더욱 힘찬 재판 투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명의 사회주의자들은 응원해 주신 동지들께 신뢰와 애정을 보냅니다.

★ 그리스의 활동가들이 IS 사건 재판 계류자들의 재구속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냈습니다.(다른 국가 활동가들의 지지와 연대는 다음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 서명자(단체) 명단 : 좌파 연합의 알렉스 알라베노스 유럽의원과 지아니스 드레가자키스 의원, 아테네 노동센터의 지아니스 조플리스, TV 노동조합원이자 PASOK 중앙위원 마리아 페레기아다키, 진력노조의 니코스 포토폴로스, 그리스 <노동자 연대> 전문의 파노스 갈가나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지년의 마리아 스틸부, 마르크스주의자 서점의 지아니스 시과타키스, 노동자 민주주의 출판사 코스타 피타스, 그리스 사회주의 노동자당 중앙위원회, 서부 아테네 교사노조 총회, 아테네 대학 역사학, 철학, 법대 학생회 (현재 아테네 대학 학생들은 그리스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3부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지난해 6월 방미한 김대중에게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인들

검찰·법원의 신념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

인권 탄압 중단하라!

국민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50년 만의 정권교체,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도 살리고 사회정의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헌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이 땅 민주주의의 실현을 꿈꿔온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켜보아야 했다.

국민정부 1년 째, 세계인권선언이 50주 년이 되는 해인 올해, 여전히 대학가에는 불심검문이 자행되고, 생존을 위해 항의했던 노동자들은 구속되었다. 이 나라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여전히 제약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상을 수상하며, '인권대통령'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국내 양심수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인권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 도대체 이 나라 인권은 어디에서 신장되었다는 것인가.

전향제도에 다름 아닌 준법서약서를 만들어 양심수보다는 5·6공 파렴치한들의 사면·복권에 열을 올리고, 이 땅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수많은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체처두고 우리의 국민을 살해한 주한미군을 사면시키는 이 정부가 인권정부라는 말인가!!!

더구나 경제공황에 돌입한 이 나라에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탄압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난 극복의 미명아래 국민의 정부는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참혹하게 학생들과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

김대중 정부들어 최초의 조직사건으로 기록된 IS사건에서 구속된 사람들 중 1심에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 재구속의 위협이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재판정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미 5월 7일 IS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인하대 의대)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시킨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그들의 말대로 진정한 인권정부를 자처하려면 우선 국가보안법 철폐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취임이후 수백명에 이르는 양심수를 만들어 낸 것도 모자라 법정 구속이라는 새로운 인권탄압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특정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신봉할 것을 국가가 강요할 권한이 없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을, 또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것을 강요할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사상의 자유'에 대한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조차 없다.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유지시키는 한 이 나라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이 나라 젊은 양심들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부를 반대한다.
국가탄압에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이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31대 자주경희 총학생회(건준위)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방어하는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연대!! 그 공존의 새 질서를 향한 1만의 행/ 동/ 선/ 언
31대 자주경희 총학생회(건)

IS 법정 구속 사태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재판정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미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시킨 것이다.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떠들석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대가로 법정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석방되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제사회주의자 이의철 씨의 법정 구속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을 규탄합니다.

이에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김대중 정권에 정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국제사회주의자 이의철 씨를 무조건 석방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며, 이를 억누르는 법적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민주와 진보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99년 1월 21일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IS 동지들 법정재구속 반대 성명서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법 형사2부 재판정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집유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시켰습니다.

담당판사인 박송하는 '사회주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풀어줄 수 없다'면서 전례가 없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법정구속을 빌미로 하여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올해 8.15 특사 때 '사상 전향제도 폐지'를 그렇게도 생색을 냈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준법서약서'를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향제도를 대체하는 준법서약서 제도 역시 개인의 정치,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준법서약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다시 감옥에 갇혀야만 합니다.

한총련의 정당한 요구인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적단체로 규정하면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7기 한총련에 대해서 조기와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양대, 고려대 총학생회장님이 구속되었으며 다른 학교의 학생회에 대한 탄압 또한 조만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여타 진보적 사회단체, 사회과학 출판사에 대한 탄압 역시 여전합니다. 11월 말경에 책갈피 출판사와 풀무질 출판사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분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과연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까?

미 제국주의와 김대중 정부에 탄압받는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처벌받을 일이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까?

동국대학교 31대 자주적 총학생회와 사범대, 생명자원과학대, 경상대, 예술대, 사회과학대, 동아리연합회, 총대의원회,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에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뭉치고 공동으로 싸워 나갈 때만이 이 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이의철 씨를 비롯한 국제사회주의자를 즉각 석방하라!

준법서약서 제도를 즉각 철폐하라!

반통일적, 반노동자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즉시 석방하라!

7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폐하고 학생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민족동국 31대 자주적 총학생회

자주적 사범대 학생회 / 자주적 예술대학생회 / 자주적 경상대학생회 /

자주적 생자대학생회 / 총대의원회 / 15대 자주적 야간강좌 총학생회 /

15대 동아리연합회 / 12대 사회과학대학생회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IS 재구속 규탄! 이의철씨 재구속 규탄한다!

자칭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하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도 벌써 1년여가 다 되어간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우리사회 인권의 현주소는 우리에게 분노를 치밀게 하기에 충분하다.

제정된 지 50주 년이 지난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국내외의 규탄과 폐지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용공조작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숫자는 지난 김영삼 정권 시절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가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제시한 준법서약서는 또 다른 사상 전향서에 지나지 않았고, 제 사회단체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인권위원회'가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대로 만들어질 지경이다. 그리고 여전히 행해지는 불심검문과 연행, 평화집회에 대한 폭력진압 역시도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없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이번에 일어난 "이의철씨 재구속" 사건은 또한번 김대중 정권하의 인권 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적인가 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김대중 정권 최초의 조직사건으로 기록될 소위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5월 이후 22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구속 및 조사, 재판의 과정에서 많은 청년학생들이 고문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이 중 이의철 씨(인하대 의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검찰의 항소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재구속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것만도 억울한데, 한번 풀려났음에도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김대중 정권이 법정구속 위협으로 사실상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대중 정권은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도입하면서, 법 준수 의지 여부만을 따지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재구속한 일은 기만적인 준법서약서 조차도 대외 선전용에만 불과할 뿐임을 알게 해준다. 얼마나 많은 양심수들이 또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재구속될지 심히 염려된다.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다.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폐지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권유지의 연모로 삼고 있다. 새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300여명이 넘어서는 등 아직도 법폐지의 논의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또 북풍, 총풍 등으로 이북의 지도부와 실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은 민주진보세력이 아니라 그들 자신임을 스스로 드러낸 지금, 그들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민주진보세력을 탄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이와 같이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인권 대통령인양 외쳐대면서, 속으로는 위와 같은 인권탄압을 그 어느 독재정권보다 광폭하게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IMF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담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커지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이와 연대하려는 민주진보세력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 때 만들어진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이용해 노동자·민중과 민주진보단체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노골적인 인권탄압을 숨기기 위해 겉으로는 인권법 제정, 인권위원회 설립 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권하에서의 인권정책의 허구성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년서강 제 29대 총학생회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인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말로만 치장된 현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행보에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청년서강 29대 총학생회에서는 불심검문 반대와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 양심수 전원 석방,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김대중 정권은 법정구속 위협으로 사상전향을 강요하지 말라!
 법정구속된 이의철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공안탄압 중지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세계인권선언 및 국가보안법 50주년의 끝자락에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는 모든 인권탄압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청년서강 제29대 감/동/선/언 총학생회

IS 법정구속 규탄!

방학을 맞아 벌써 몇 번 췌인지 모르겠습니다. 쉬지 않고 국가보안법 얘기를 해도 그 법의 피해사례는 더 늘어만 날 뿐입니다. 우리의 인권대통령은 언젠가 되야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지.....(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나서 일까?)

며칠전(1월 14일) 명동성당 입구에는 못보던 천막 하나가 또 생겨났다. 그것은 바로 'IS 출소자 대책위'가 자신들의 법정구속을 규탄하며 세운 천막이다.

지난 98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정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었다. 98년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의철 씨(이하대 의대)가 다시 끌려가 재구속(법정구속)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5월에 함께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른 12명의 사람들도 똑같이 법정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이 바로 천막농성의 주인공들이다. 먼저 이의철씨가 다시 형을 선고받은 과정을 보면,

- 재판장: 피고인은 1심 최후진술에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이의철: 그렇다.
- 재판장: 어허!!!! 피고는 검사가 항소한 이유를 잘 모르나 보지...?

어이없게도 이의철 씨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이유만으로 재구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습이다. 머릿속의 생각만으로도 사람을 가둘 수 있는 나라.

그러한 법조항이 엄연히 효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여전히 '슈퍼올트라-파워!!!' 인 국가보안법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가둘 수 있는 법. 그래서 항상 정권 유지의 유용한 도구로 쓰여진 법. 대통령조차도 피해자였음을, 자신은 민주투사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하곤 할 때 쓰이는 바로 그 법.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와 여러 세계인권단체에서 끊이지 않는 지탄의 대상이었다. 또한 수감중인 몇 백의 양심수 역시 인권유린의 상징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법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무공처럼 죄목을 갖다붙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악법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분단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이보다 더 정권유지자들에게 유용한 법은 없었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 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국가안보로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데도 그만이며, 생존권을 요구하며 정권에 대드는(?) 노동자 '민중을 놀려버릴 수 있는 법'도 바로 이 법인 것이다.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법정구속(재구속)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이번 법정구속사건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서를 쓰게 한다는 정권의 위선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인간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유 권한이며 사상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리는 어떠한 자유도 거짓이다. 우리는 그 자유가 울퉁이 지켜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기만적인 대체입법 추진 반대!! 사상의 자유 보장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99년 1월 18일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이의철 씨 법정구속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박송하) 재판정에서 아주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행사가 떠들썩하게 진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재판정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대가로 법정구속(재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은 기만적인 준법서약제를 만들 때도 "사상을 전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1심에서 풀려난 양심수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버리라고 협박하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이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대중 정부의 인권성적표는 취임 이래 구속된 311명의 양심수와 182명의 정치수배자 그 보잘 것 없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의철 씨를 비롯한 10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S)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출소자들은 검찰이 항소를 해 다시 한 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의철 씨 석방 그리고 모든 양심수 석방을 위해 함께 싸워나갑시다.

98년 12월 29일
42대 서울대 총학생회

이의철 씨 법정구속을 규탄한다

인권을 이야기 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정구속 이라니!

1심에서 풀려난 이의철 씨(IS 사건 관련)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재구속한 일은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재판을 받는 것도 부당한 일인데 1심에서 나온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양심수에 신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구속시키는 일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이라는 올해 여전히 4백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정치, 사상의 자유는 개인의 신념문제입니다.

개인의 사상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일은 더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을 뒤지고 개인의 신념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민중시대 공대학생회는 국가보안법철폐와 이의철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1998년 12월 21일
서울시립대학교 공대 학생회

IS계류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IS사건 재판계류자들의 천막농성을 지지합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끝장내자!!

영하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명동성당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그들 중에는 '양심수 석방, 법정구속 반대, 사상재판 반대'를 주장하는 8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International Socialists of South Korea)도 있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에 구속되었던 사회주의자들 중에 집행유예를 풀려난 이들로, 검사측의 항소로 인한 법정구속의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해 농성 중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초보적인 자유조차도 용납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이 땅에는 400여명 양심수들이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감방 속에 갇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 때문에 범죄자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 역시 이런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법정에서 재구속된 이의철 씨의 예에서도 드러나듯, 국제사회주의자들과 관련된 현재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마치 중세의 종교재판과 마찬가지로 사상재판이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벌써 27명의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연행·구속되었는가 하면 한총련 대의원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앞뒤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다면 이와같은 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근절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세기 동안의 대중들의 투쟁과 그들의 피를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민중서울시립대학교 실천하는 8대 언론협의회

IS 법정구속 규탄 성명서

지난해 11월 6일 서울고등 법원 형사2부 재판정에서 진행된 이의철 씨 법정구속 사태는 김대중 정부의 기만적인 인권탄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었다.

지난해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를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시킨 것이다. 담당판사인 박송하 부장판사는 "사회주의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풀어줄 수 없다"는 말로 현대판 마녀사냥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우리 학교 사학과 96학번 이지영 학우를 비롯한 11명의 국제사회주의자 출소자들은 다시 구속될 상황을 눈앞에 두고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탄압에 맞서 굴하지 않고 지난 1월 13일 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법정구속을 무기삼아 사상을 전향할 것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해 인권문제에 있어 커다란 업적이라도 남긴 듯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준법서약서' 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설명하면서 "사상을 전향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다.

수많은 인권단체의 반대와 아직도 추운 겨울을 0.75평 마루바닥에서 곳곳이 버티고 있는 양심수들의 거부 투쟁으로 준법서약서의 기만성은 이미 드러났지만 이번 국제사회주의자 법정구속(재구속) 사건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 정책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 인권 대통령이라 자임하고 있지만 국민정부 탄생 1주년이 지난 지금 거꾸로 가는 인권정책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아직도 감옥 안에는 500명이 넘는 양심수가 존재하며 이중 300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들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규정에 의한 한총련에 대한 탄압도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새세기가 눈앞에 와있는 마당에 대체 누구를 적이라 규정하고 이적단체라 이야기한다는 말인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구시대적, 반민주 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이 어찌 사상전향 강요가 아닐 수 있으며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 하나로 인간의 모든 자유를 순식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며 어찌 민주주의 국가라 자칭할 수 있는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만 그 의미가 남아있을 뿐인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투쟁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악법의 이름으로 탄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것만이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오랜동안 기다려온 전국민의 열망을 파쇼라는 이름으로 더럽히지 않는 길일 것이다. ;

애국한양 27대 중앙운영위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남기문 / 선봉공대 학생회장 김복기 / 밝은동아리연합회장 이태호
해방법대 학생회장 이우정 / 실천사범 학생회장 이우성 / 진군사회대 학생회장 오미숙
민주상경 학생회장 김용도 / 주체생과대 학생회장 박성혜 / 애국한양 문학예술 학생연합 의장 이정현
민족음대 학생회장 최소정 / 청년인문 학생회장 박영웅 / 단결의대 학생회장 백대현

법정구속 무기삼아 사상전향 강요행위 즉각 중단하라!!
사상, 양심의 자유 가로막는 준법서약제도 철폐하라!!
반민주적 반통일적 구시대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법정구속 이의철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현대판 마녀사냥 한총련 탄압 중단하고 이적규정 철폐하라!!

알림) 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302호 재판정에서 이지영(애국한양 사학 '96)학우를 비롯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집행유예 출소자들의 항소심 공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동의할 수는 없으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으로 인해 누군가에 의해 탄압받는다면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했던 볼테르의 말을 기억하며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형들을 만나러 갑시다.

그리스에서 온 편지

동지들에게,

우리는 벌써 신념 철회 강요과 사상재판에 맞서고 있는 재판 계류 국제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항의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알레코스 알라바노스(Alecos Alavanos), 좌파동맹(SYN) 소속 유럽연합 의원.
 지아니스 드라가사키스(Gianis Cragasakis), 좌파동맹 소속 국회의원.
 지아니스 치그올리스(Giannis Tsigoulis), 아테네 노동센터(EKA).
 마리아 프라지아다키(Maria Fragiadaki), TV 노조, 범그리스사회당(PASOK) 중앙위원.
 니코스 포토풀로스(Nicos Fotopoulos), 전력노조(ETE DEI)
 파노스 가르가나스(Panos Gargana), <노동자 연대> 신문.
 마리아 스틸로우(Maria Styllou),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잡지.
 지아니스 시파카키스(Gianis Sifakakis), 마르크스주의 서점.
 코스타스 피타스, 도서출판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중앙위원회.

아래 노동조합과 학생회의 총회에서도 항의서한이 다수결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아테네 교원노조 총회
 아테네 대학 역사·철학부 학생총회
 아테네 대학 법학부 학생총회

이 세 총회에서는 동지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리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과 점거를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남한 사회주의자 방어위원회와 앨릭스 캘리니코스의 편지

동지들에게,

저는 전세계의 '남한 사회주의자 방어위원회' 지지자들에게 당신들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민적 자유의 '옹호자'라는 위선을 부리고 있는 남한 국가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당신들의 투쟁은 우리를 고무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런던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방어위원회가 피켓 시위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의 피켓 시위들처럼 이번 시위도 남한 정권의 위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투쟁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동지적 인사를 보내며
 앨릭스 캘리니코스
 남한 사회주의자 방어위원회

영국 노동자들의 성명서

우리는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특히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 (ISSK) 조직원들에 대한 연행과 구속과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을 구속하고 탄압하기 위해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며 김대중 정권이 모든 저항 세력을 탄압하려는, 숨기려 해도 뻔히 알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400여 명의 정치수가 구속됐다는 것과 이 중 일부가 정치적 신념을 부정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려는 의도를 비치고 있는 항소법원에서 심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수들을 무조건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표현·출판·양심의 자유 같은 인권의 회복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힘닿는 데까지 여러 공개적인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현재 행위를 폭로하고 석방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고든 화이트, 영국 전교조 노샘프턴셔 주 위원장.

케이 매카시, 교사, Milton Keynes, Buckinghamshire UK.

톰 설리반, 영국 워릭셔 주 럭비 시 성인교육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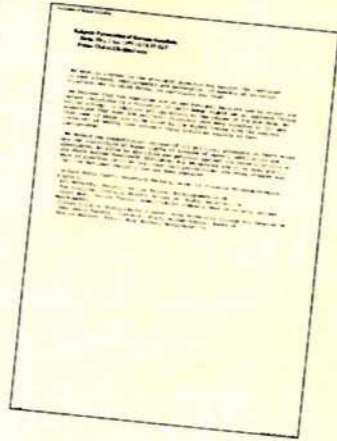
로라 웨스트, 노샘프턴 시 니네(Nene) 대학 대학생.

세리카 테일러, 상동.

스티븐 크로우티에, 동대학 대학원생.

존 헨리, 교사, Ousedale School, Milton Keynes, Bucks UK.

마틴 멀로니, 영국 노샘프턴 시 점원.



청와대에 항의한 영국 교수

아래의 전자우편을 한국 정부 웹 사이트에 보냈습니다.

대통령,

저는 과거 정부 아래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당신에게 탄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SK) 조직원들을 구속하고 괴롭힘으로써 당신의 국제적 평판을 그토록 심각하게 더럽히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 공업 사회에서 정치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당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한국의 감옥에 있는 4백여 명의 정치수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과거에 당신 자신도 그 때문에 감옥에 갔던 국가보안법은 당신이 대통령인 한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저는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SK) 조직원들이 이미 그 전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도 항소법원에서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될 위협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 당신이 공언한 말들과 모순되는 일입니다.

저는 한국이 민주적·문화적 선진국으로 존중받으려면 이런 탄압이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상천 법무부장관 귀하,

저는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SK) 조직원들이 구속돼 괴롭힘 당하고 있는 데 항의합니다.

... 그러한 인권유린은 법무부 영문 홈페이지의 배너("인권과 함께 숨 쉬는 법과 질서")와 너무나 모순되는군요.

영국 리즈 대학 식품물리학 교수

닥터 말콤 포비

영국 SWP 동지들의 인사

친애하는 동지들,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SK) 안녕하십니까, 영국 리버풀에 사는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들입니다.

억압적이고 사악한 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지들은 우리를 고무하고 있습니다.

형제애적 인사를 보내며
존 에클리스와 그 외

또 하나의 항의서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부에 보낸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귀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남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SK) 조직원들과 4백여 명의 정치수들을 석방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국제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미국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위원회
도언 피스트리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참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저희는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활동을 열심히 수행한 덕성여대 학우들입니다.

일주일 간의 농성투쟁을 성과적으로 정리하고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애국하는 청년 학생들의 모습을 두고만 볼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98년 6기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자연대 학생회장 전해영 학우가 명동성당을 나가다 사복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습니다. 정권의 존립을 위해 목을 매는 김대중 정권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놓고 대의원들을 연행·구속시키는 등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 받기 위한 투쟁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통일된 조국 건설의 길에 IS 형님들과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중이 조국과 민중을 위해 쓰라고 준 몸 건강하십시오.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덕성여대 드림

이의철 씨와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지지 모금에 감사드립니다

민권공대위 송년의 밤에서 6만 원 / <<양심수 없는 나라>> 출판기념회에서 2만2백50원 / 건국대·세종대·건국대에서 1만 9천5백90원 / 삼성자동차 빅딜 반대 집회에서 4만 6천4백50원 / 민권공대위 반미·반전 집회에서 2만1천 원 / 고대와 경희대에서 열린 등록금 삭감 집회에서 3만 1천2백80 원 / 시립대 언론협의회에서 1만 3천7백80 원 / 기타 개인들이 11만 원 / 기타 학교에서 33만 4천3백50 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신념 철회 강요에 항의하는 서명에 많은 단체와 동지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재판 계류 사회주의자들은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항의한다

1999년 1월 25일 현재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은,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

강희남 범민련 의장 / 민권공대위 진관 상임대표 / 오세철 정치연대 대표 / 민가협 권오현 공동의장

김귀식 전국교원노조 위원장 / 박해전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 / 최혁 청년진보당 대표 / 현대중기산업노조 박복찬 위원장 / 김종맹 한총련학부모협의회 대표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 신창화 민주노총 조직부장 / 고민택 민주노총 고용대책국장 / 함평기 전해투 조직투쟁국장 / 김지영 인의협 인권위원장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전국빈민연합 양연수

만도기계 명동성당 농성단 선병규, 김희준, 김인식 / 삼성자동차비대위 조익형, 손우명, 서봉진, 박순호, 김태윤, 정의재

한총련 농성단 장훈교 단장, 이주호 부단장 /

국민승리21 최기영 대표비서, 김종철 / 정치연대 윤문호 / 범민련 강순정, 김선분, 박정숙, 장효순

민권공대위 한지훈 / 민자통 류금수, 권오봉, 김규철, 문재용 / 민가협 정연도 / 유가협 손승필

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이상목 교육부장, 김만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한기명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단체 연대회의 김학철 기획국장 / 한국교육연구소 정충일 /

크리스찬 신문사 최지영, 김기원 / 노정추 회원 문영호, 변인숙 / 향린교회 임태환, 정혜열, 이동용 / 12기 서총련 한민우, 박주만

서울대 박진규 사회대 학생회장, 류주형 법대 학생회장, 김수정 공과대 학생회장, 김경아 동아리연합회장, 21세기진보학생연합 강선모 / 그 외 서울대생 37명

연세대 신승헌 문과대 학생회장(7기 한총련 대의원), 이인웅 상경대 학생회장(7기 한총련 대의원), 노선일공과대 학생회장(7기 한총련 대의원), 김석래 이과대 학생회장(7기 한총련 대의원), 강성덕 인문학부 학생회장, 최영호 동아리연합회 회장 / 그 외 연세대생 7명

고려대 문보경 공대학생회장 / 이동혁 사범대 학생회장, 이해미 사범대 부학생회장, 안규진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항의합니다!

지난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21. 인하대 의대 1년)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인권현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개인의 사상이 처벌 받는 것도 부당한 일인 데 심지어 1심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풀려난 양심수를 다시 사상재판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심에서 풀려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념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명백하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재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무려 열 두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재구속된 이의철 씨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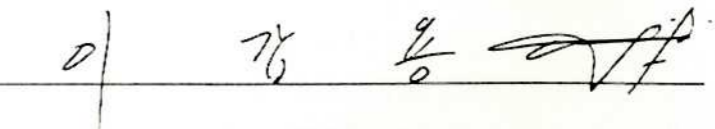
우리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회주의자들에게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신념 철회를 강요하는 검찰과 법원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합니다.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를 즉각 석방하라!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사상재판 중지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 서명 :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중인 사회주의자들

문과대 학생회장, 이길수 법대 학생회장, 안규진 문과대 학생회장, 정지영 문과대 부학생회장, 임현숙 경영대 학생회장 / 식량자원학과 학생회 / 그 외 고대생 10명

한양대 남기문 부총학생회장, 오미숙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자연대 부학생회장 정현주, 장수원 법대 부학생회장 / 그 외 한양대생 14명

국민대 김경범 총학생회장, 고재호 부총학생회장, 금창성 동아리연합 부회장 금창성, 김찬일 경상대 학생회장, 권영욱 공과대 학생회장, 박수형 법대 학생회장 / 그 외 국민대생 1명

서강대 총학생회

세종대 총학생회 / 그 외 세종대생 2명

경기대 장인자 총여부학생회장 외 5명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신문사, 대학문화 교지편집실, 공대 학생회, 도시과학대학생회, 법학과 학생회장, 법학과 부학생회장, 행정학과 이선중

성균관대 경영학부 이범수 외 2명

동국대 김호중 총학생회장, 정나현 부총학생회장, 이승복 야간간좌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최진범 총대의원회의장, 곽우기 불교대 대의원장, 김희정 사범대 학생회장, 이재연 예술대학 학생회장, 박종근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 김경원 동아리연합회 부학생회장 / 그 외 서울시립대생 15명

이현수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서양어대 학생회 추진길, 동양어대 학생회 권영순, 사회과학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외대 학보사, 행정학과 학생회, 터키어과 학생회, 영어과 학생회, 포르투갈어과 학생회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안현선 외 16명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문리과대학생회, 법대학생회, 의대학생회, 치대학생회, 정경대학생회, 관광대학생회(건), 문리과대학 사학과 학생회, 국문과 학생회, 이학부학생회(건), 영어학부학생회, 정경대학 의료경영학생회, 정경대학 의료경영 학생회, 경제통상학부 학생회, 정치대학 정치행정·사회과학부 학생회

한성대 손진우 총학생회장, 김신혜 총여학생회장, 전성대 동아리연합회장 / 그 외 한성대생 4명

숭실대 행정대학원 김갑술

서일전문대 신문사 편집장 유철호

인하대 김지송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19대 경상대 학생회장, 박소영 의과대 학생회장, 박승문 법정대 학생회장, 김정아 문과대 학생회장 / 그 외 인하대생 3명

배동인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외 시민·노동자 18명

★ 국가보안법 철폐! / 양심수 전원 석방! / 사상재판 반대!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항의합니다!

지난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이의철 씨(21. 인하대 의대 1년)을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인권현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에 의해 개인의 사상이 처벌 받는 것도 부당한 일인 데 심지어 1심에서 이미 처벌을 받고 풀려난 양심수를 다시 사상재판이라는 도마 위에 올려 놓고 심판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1심에서 풀려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념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가두는 행위는 명백하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자신의 신념을 재판정에서 공공연히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재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무려 열 두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재구속된 이의철 씨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사회주의자들에게 법정구속을 위협으로 신념 철회를 강요하는 검찰과 법원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합니다.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를 즉각 석방하라!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사상재판 중지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서명:

추진 양길

국방청리리 대협

검찰·법원의 신념 철회 강요에 저항하는 재판 계류 중인 사회주의자들

(뒷 표지에서 이어집니다)

려집니다. 그 첫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구속되는 것은 단지 남은 순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연히 기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대답해 놓고 어떻게 계속 집유를 유지할 수는 없을까 하고 주저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동지들에게 먼저 결심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Yes or No.

재판장에서 '나는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해 놓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 11명의 동지들이 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1년 6개월의 실험을 선고 받은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던 1년 6개월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칼날을 날카롭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당히 구속당하는 것을 택함으로써 김대중의 온갖 미사여구가 단지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폭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속당하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심지어 지금이라도 반성문을 쓰고 나갈 수는 없는가라고 후회하다가 마음을 단단히 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11명의 동지들에게 작년 서준식씨가 한 총련 대의원들에게 한 말인 '구속을 택함으로써 정신의 젊음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몸이 구속당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잠시일 뿐이고 세계 혁명운동에서는 말할 나위 없이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소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지요. 최후진술을 다시 하는 것도 준비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저는 판사의 첫 질문에 묵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첫 질문에 묵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후 예상되는 질문에 묵비에 맞춰 준비를 해야겠지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것이 준비가 되겠지요. 하지만 묵비를 택한 동지들의 자신감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집유로 나온 것 자체가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한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신체의 구속이 가해지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이 글이 그 11명에게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구속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나려는 것은 자본주의가 끝장나지 않는 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부디 이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1998년 12월 12일
독방으로 전방은 날 입김을 불어가며,
먼저 구속을 택한 의철 씬

P.S. 저처럼 재판장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가령 북한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 일본, 남한 지배자들의 위선을 폭로할 수도 있었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투쟁!!

지난해 11월 사상재판을 자행한 항소법원에 의해 법정구속된 이의철 씨* 편지

“두려워 마십시오, 몸이 구속당하는 것은 잠시입니다”

영철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책도 두 권 다 12월 11일에 잘 받았습니다. 특히 '철학 논쟁'은 제가 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하루소식)에 저의 법정구속 소식이 실렸다니 정말 기쁘군요.

저의 법정구속은 제가 받은 재판이 말 그대로 '마녀 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나라 지배자들이 지금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저의 일을 자신들의 기관지에 실어 김대중 정권의 본모습(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을 폭로하는 데 근거로 사용한 인권운동 사랑방에 깊은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한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있더군요. 11명의 동지들이 저를 구속시킨 재판부에 배당 되었다니 그들도 저와 같이 재구속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재판의 심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사는 아무런 심문 없이 판사가 처음부터 직접 질문을 해왔습니다.

판사: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1심에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이의철: 같습니다.

판사: 어허! 검사가 재범 우려 때문에 항소했는데 아직도 그러는군. 최근 북한에선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이의철: 제 행위에 대한 판단은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내려졌습니다.

판사: 지금은 새롭게 재판을 시작하는 거다. 1심의 결과는 상관없다. 동구권 및 소련이 몰락한지 오래인데 아직

도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를 하는 것 아닌가?

이의철: 동유럽이나 소련, 북한 등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들 나라들은 국가 관료들이 남한 등의 사장들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가자본주의일 뿐입니다. 이들 나라들도 노동자들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판사: 피고인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이의철: 자본주의는 이윤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판사: 지금 피고인은 추상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말을 했는데, 의대 공부하기도 바빴을 텐데,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연구나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

이의철: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시고 놀 때, 저는 책을 봤습니다.

국선변호사: 의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것이죠?

이의철: 예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나요?

이의철: 모르겠습니다.

대충 구형 공판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판사의 첫 질문부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판사가 세계 나오자 불안한 마음이 들 어 말을 아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판사의 판결은 1심 판사와 검사 중 1심 판사 쪽으로 팔이 굽을 거라고 생각하고 1심에서 집유를 받은 걸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생각들이 후회스럽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것인지, 원심을 파기하고 실험을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첫 질문에서 내

(88쪽으로 계속됩니다)

* 인하대 의대생 이의철 씨는 지난해 5월 7일 국제사회주의자 조직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몇 개월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어이없게도 항소법원에서 재구속당했다. 추가된 공소 사실은 없었다. 단지 신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